

제 1 교시

국어 영역

성명		수험 번호																	
----	--	-------	--	--	--	--	--	--	--	--	--	--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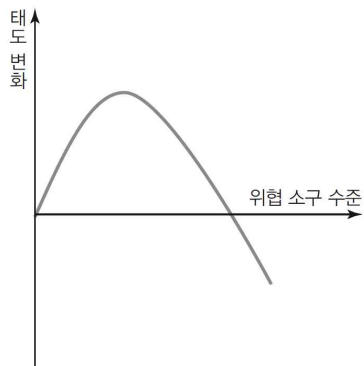
가독성을 위해 여백으로 남겨두었다.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설득 전략 중 하나인 ㉠ ‘위협 소구’는 수신자에게 위협이나 공포감을 불러일으키는 방법이다. 여기서 공포란 외부 혹은 내부의 사건에 의하여 야기되는 걱정, 불확실성, 불안전, 그리고 인지된 위협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음주 운전 방지를 위한 공익 광고 영상에서 “필름은 되돌릴 수 있지만 생명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라고 말함으로써 공포심을 유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어떤 학습 이론가들은 강력한 수준의 위협 소구가 더 많은 주목과 이해를 유발하기 때문에 태도를 더 많이 변화시킨다는 가설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강력한 수준의 위협 소구를 사용할 경우, 감정적 긴장 정도가 높아져 분노나 회피 등의 자발적 방어 반응이 유발되어 설득의 효과가 줄어들기도 하기 때문에 위협 소구를 사용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위협 소구의 효과를 조사하기 위한 최초의 연구는 재니스와 페쉬바흐의 고전적 실험인데, 이 실험은 강력한 수준의 위협 소구의 역효과를 보여 준다. 재니스와 페쉬바흐는 치아 위생과 관련한 강력한 위협, 중간 정도의 위협, 최소한의 위협 등으로 구성된 서로 다른 세 가지 수준의 위협 소구에 관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학생들이 치아 위생을 위해 권고한 사항을 따르게 하는 데는 최소한의 수준의 위협 소구가 가장 효과적이었다. 강력한 수준의 위협 소구는 가장 효과가 없었다. 이것은 위협 소구의 수준이 너무 강하면 커뮤니케이션 효과를 감소시킨다는 증거였다. 그러나 이후 진행된 위협 소구 연구에서 이와는 다른 결과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레벤달과 나일스는 금연에 관해 위협 수준을 달리하는 실험을 수행하였는데, 그 결과는 강한 위협 혹은 공포가 태도 변화를 촉진시킨다는 사실을 보여 주어 재니스와 페쉬바흐의 연구 결과와는 상반된다. 이러한 상반된 결과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것은 위협 소구의 효과가 위협의 강도보다는 메시지 전달자의 권고가 얼마나 설득력을 지니는가에 달려 있음을 보여 준다. 즉 치아 위생을 위한 권고 사항인 양치질은 수용자들에게 충치를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금연은 폐암을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으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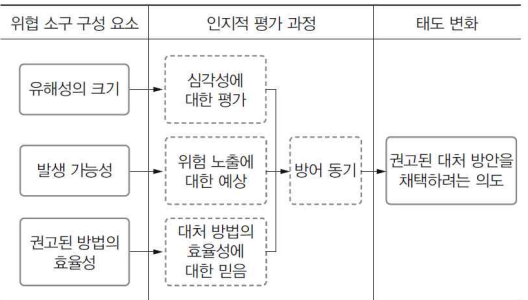
이러한 상이한 결과를 보이는 연구들을 참고하여 다양한 실험을 진행한 후, 재니스는 최초의 연구 결과를 수정·보완하여 ‘곡선 이론’이라는 하나의 모델을 만들었다. 이 모델에 따르면, 위협 소구의 수준과 태도 변화 간의 관계는 곡선을 형성하고 있다. 강력한 수준이나 최소한의 수준의 위협은 약간의 태도 변화를 일으키지만, 중간 정도 수준의 위협은 상당히 많은 태도 변화를 유발한다는 것이다.



〈재니스의 곡선 이론〉

로저스의 방어 동기 이론은 설득을 하는 데 위협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보다 체계적으로 설명한다. 로저스는 위협 소구의

구성 요소로, 묘사된 사건의 유해성의 크기, 그러한 사건의 발생 가능성, 권고된 방법의 효율성 등 세 가지를 제시한다. 이 구성 요소들은 인지적 평가의



〈로저스의 방어 동기 이론〉

과정을 거치는데, 이 인지적 평가 과정을 통해 형성된 방어 동기가 태도 변화의 양을 결정한다. 위협 소구를 접했을 때, 만약 묘사된 사건의 유해성의 크기에 대한 심각성에 동의하지 않거나 실제로 일어날 것 같다고 생각되지 않는 경우, 또한 권고된 행동이 적합하다고 생각되지 않는다면 태도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

위협 소구와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또 하나의 요소는 설득의 상황에서 ‘위협 소구가 손실의 차원에서 제시될 것인지 이득의 차원에서 제시될 것인지’이다. 손실의 차원에서는 어떤 행동을 하거나 하지 않음으로써 기회를 잃어버리거나 부정적 결과가 증가할 수 있다는 위협이 제시된다. 이득의 차원에서는 반대로 기회를 얻거나 부정적 결과가 감소한다는 내용과 관련해 위협을 제시한다. 손실을 강조할 것인지 이득을 강조할 것인지는 커뮤니케이션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전략을 선택해야 한다.

일부 연구에 의하면 공포를 불러일으키도록 고안된 공익 광고가 의도하지 않은 다른 감정들도 함께 유발할 수 있음이 밝혀졌다. 놀람이나 슬픔과 같은 감정은 메시지의 수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반면, 당황함이나 분노와 같은 감정은 메시지 수용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다양한 감정을 유발하는 위협 소구의 사용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

1.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재니스의 곡선 이론에 따르면 커뮤니케이션 수신자의 태도 변화와 위협 소구의 수준은 반비례 관계이다.
- ② 로저스는 위협 소구 구성 요소에 대한 인지적 평가 과정이 태도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 ③ 재니스와 페쉬바흐의 고전적 실험에서 강력한 수준의 위협 소구가 가장 효과가 크다는 가설이 틀릴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 ④ 위협 소구를 사용하여 설득하는 경우,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환기되는 감정이 다양할 수 있어 의도한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 ⑤ 재니스와 페쉬바흐의 고전적 실험과 레벤달·나일스의 실험이 상반된 결과를 보이는 것은 권고가 지닌 설득력이 태도 변화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여 준다.

2. 윗글의 ㉠과 <보기>의 ㉡를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 접종 이론은 수신자가 지닌 신념이나 태도에 반하는 주장을 수신자에게 약하게 노출시킴으로써 개인의 태도와 신념이 외적인 변화 요인에 저항력을 가지게 할 수 있다는 커뮤니케이션 이론이다. 설득 과정에서 미리 같은 종류의 약한 커뮤니케이션을 주어 면역을 만들어 두면 강한 설득을 받아도 저항하게끔 된다는 것이다.

- ① ㉠과 ㉡ 모두에서 강력한 수준의 메시지가 커뮤니케이션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유리하다.
- ② ㉠과 ㉡ 모두 메시지의 반복적인 전달이 커뮤니케이션에 효과적이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 ③ ㉠은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수신자의 신념을 강화하는, ㉡는 약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 ④ ㉠은 이성적 차원에서, ㉡는 감정적 차원에서 수행될 때 보다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다.
- ⑤ ㉠은 수신자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는 것에, ㉡는 수신자의 태도와 신념이 변화 요인에 저항력을 가지는 것에 메시지 전달의 목적이 있다.

3.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레든은 죽음의 위협을 멀게만 느끼는 십 대들에게 제시하는 에이즈 예방을 위한 메시지에서, 어떻게 위협 소구가 이용될 수 있는지 연구했다. 실험 결과 청소년을 겨냥한 매스 미디어 메시지는 강력한 수준의 위협이지만 먼 미래의 일로 인식되는 죽음을 강조하기보다 정신 장애, 피부 발진, 친구 관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 즉각적인 결과를 강조하는 것이 효과적이었다.

힐은 에이즈 예방 광고에 나타난 위협 소구의 효과를 연구하였는데, 실험에서 중간 정도 수준의 위협 소구의 효과가 최소한의 수준이나 강력한 수준의 위협 소구의 효과보다 높게 나타났다. 힐은 최소한의 수준의 위협 소구는 에이즈의 유해성이나 발생 가능성에 대해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며, 강력한 수준의 위협 소구는 개인이 기존에 갖고 있는 에이즈에 대한 두려움과 결합될 때 지나치게 위협적인 것으로 나타난다고 말했다.

- ① 레든과 힐은 이득의 차원에서 위협 소구의 내용을 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군.
- ② 힐의 위협 소구 연구 결과는 재니스의 곡선 이론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군.

- ③ 로저스는 힐의 연구에서 최소한의 수준의 위협 소구는 그 구성 요소가 인지적 평가 과정에서 방어 동기를 유발하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하겠군.
- ④ 레든의 연구를 통해 위협 소구의 효과를 위해서는 재니스가 주장한 위협 소구의 수준 이외에 수신자의 특성에 대한 고려도 필요함을 알 수 있겠군.
- ⑤ 재니스는 레든의 연구에서 죽음이라는 강력한 수준의 위협 소구에 비해 정신 장애, 피부 발진 등을 강조하는 위협 소구가 중간 정도 수준의 위협이라고 평가하겠군.

4.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공익 광고에 대해 판단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에서 수신자의 감정적 긴장 정도가 높아졌다면 자발적 방어 반응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겠군.
- ② ㉡는 위협 소구를 통해 수신자가 지구의 환경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태도를 변화시킬 것을 기대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③ ㉡는 로저스의 이론에 따를 때, 권고된 행동의 효율성 평가가 태도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군.
- ④ ㉡의 메시지는 손실의 차원에서, ㉢의 메시지는 이득의 차원에서 전달되고 있군.
- ⑤ ㉡와 비교할 때, ㉠, ㉢은 최소한의 수준의 위협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군.

[5~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거버넌스(governance)는 국가, 시장, 그리고 시민 사회 영역의 행위자들이 각기 자율성을 바탕으로 국정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이다. 거버넌스는 협치, 공치, 동반자적 국정 운영 등 다양한 용어로 불리는데, 국가, 시장, 시민 사회 등 사회 각 영역 행위자들 간 영향 관계에 따라 거버넌스의 형태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거버넌스 이론은 전통적으로 행정학이나 정치학에서 다루었던 내용을 거버넌스와 연계하여 연구하려는 시도이다. 거버넌스 이론은 자본주의 체제에서 과잉 생산으로 인한 실업 증가와 경제 성장 둔화, 세계화로 인한 국가 간의 경쟁 등과 관련한 정부의 개혁 필요성에 따라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미국의 정치학자 피터스는 정부의 개혁을 위한 거버넌스의 이론적 모형을 제시하였는데, 그가 제시한 거버넌스의 이론적 모형은 국가, 시장, 시민 사회 영역의 관계를 바탕으로 크게 시장 정부 모형, 참여적 정부 모형, 신축적 정부 모형, 탈규제적 정부 모형으로 나뉜다. 먼저 시장 정부 모형에서는 정부의 문제가 관료의 정보 독점으로 발생한다고 간주하고, 관료의 폐쇄성이 공공 부문의 비효율성 내지는 실패의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전통적인 관료제하에서 관료들은 정보를 독점하고 자신들의 안정적 직위를 이용해 정책에 소속 부서의 의견을 최대한 관철하려 노력하는데, 심지어 관료들은 특정 문제에 대한 검토를 막아 의사 결정의 범위를 제한하기도 한다. 이러한 까닭에 시장 정부 모형에서는 정부가 비효율성을 지닌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비효율성을 시장 정부 모형은 시장주의의 원리로 해결하고자 한다. 시장주의는 가격 중심의 자원 배분, 경쟁 원리 등을 지향하며,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 원가 개념을 중시하고 가격 대비 성능의 비율을 따진다. 시장주의는 서비스 공급 과정에서도 경쟁을 통한 서비스의 품질 관리에 관심을 두기 때문에 소비자가 제공받은 서비스에 대해 어느 정도로 만족하는지에 민감해 고객주의라고도 한다. 공공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공공 서비스의 공급을 민간에게 맡기는 민간 위탁도 고객주의에 따른 발상 중의 하나이다. 시장 정부 모형은 시장의 효율성을 신뢰하기 때문에 시장과 협력하여 공공 부문의 분권화를 지향하며, 관료에 대한 관리와 동기 부여를 위해 정당한 성과에 대한 보상과 경쟁 등 민간 부문의 다양한 기법의 활용을 제안한다. 이렇게 시장 정부 모형이 추구하는 정부 개혁의 목표는 민간 부문 처럼 경쟁을 통해 인력을 충원하고, 공공 부문을 효율화하는 것이다. 참여적 정부 모형에서는 정부를 둘러싼 문제가 기본적으로 위계 서열 중심의 조직 문화에서 비롯되는 것이라 지적한다. 서열 중심의 경직적 조직 문화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하향식 의사 결정 구조를 지니게 하며, 관료가 정책 결정을 독점하게 되는 구조를 지니게 한다.

참여적 정부 모형에서는 조직 내외의 이해 당사자 간 소통을 강조하며 참여에 초점을 두고 수평 조직으로의 개편을 주장한다. 조직 관리에서 중요한 것은 서비스 품질 관리와 팀 작업이라고 생각하여 정책 결정 과정에서 관료의 독점적 역할을 지양하고 민간 부문의 참여를 허용하면서 상호 간의 적극적 협의와 협상을 강조한다. 정부가 어떻게 국가를 운영해야 하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양한 시민들의 참여와 협의를 핵심적 가치로 삼아야 한다고 본다. 이때의 참여란 관료제 외부만이 아니라 관료제 내부에서 서열에 관계없이 일선 관료들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다.

신축적 정부 모형은 정부의 가장 큰 문제가 조직의 안정성, 영속성에서 비롯된다는 생각을 전제한다. 이 모형에서는 관료 조직의 안정성, 영속성이 정부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근원이라 생각한다. 관료 조직의 안정성, 영속성이 경직화를 야기하고, 사안에 따른 대응력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신축적 정부 모형에서는 공식적인 규칙과 제도에 의해 통제되는 정규적 조직보다는 느슨한 조직으로서의 한시적 조직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이 모형에서는 필요에 따라 한시적 전담 조직을 통해 과제 해결에 집중하고, 문제가 해결되면 조직이 해체되는 형태도 염두에 둔다. 정책 결정에서는 혁신과 실험을 강조하며, 과거의 정책 기조와 조직 내 결정 규칙의 틀에서 벗어난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정책을 제안할 것을 요구한다. 기존 정책의 경로의 의존성을 벗어나고자 하는 의도가 숨어 있는 셈이다. 이 모형에서는 정부가 느슨한 조직을 통해 서비스 생산 비용을 줄이고 다양한 이해와 조정 능력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하며, 정부 조직 및 인력 관리에서 임시 고용 제도의 확대를 주장한다. 임시 고용 제도는 관료의 직업적 안정성을 와해하는 것으로, 기존의 공무원 입직 경로나 내부 승진 외에 시민 사회 영역을 포함한 외부 전문가 등을 임용할 수 있는 개방형 임용 제도는 이러한 맥락과 닿아 있다.

탈규제적 정부 모형에서는 정부 문제 발생의 핵심 원인이 조직 내부의 규제라고 진단한다. 관료 조직 내규제라 할 수 있는 형식주의, 절차와 제약 등이 관료들의 재량을 제한하여 정부 문제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탈규제적 정부 모형에서는 관료 조직 자체의 개선 방안보다는 조직 관리에 대한 처방으로 규제를 축소하여 조직 구성원인 관료들의 자유와 재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 이 모형에서는 관료 조직이 정책 결정에 필요한 전문 지식과 아이디어의 저장소라고 보기 때문에 정책 결정 과정에서 관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효율적 정부라면 관료가 아이디어를 발휘할 수 있도록 과거의 규제와 통제에서 벗어나 다양하고 창의적인 정책을 산출한다고 본다.

거버넌스는 ① 사회 각 영역 간 관계를 고려한 국정 운영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거버넌스 이론은 국정 문제에 대한 일방적인 결정보다 사회 각 영역의 행위자를 고려한 결정에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환경 변화의 복잡성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운영 체계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5. 밑글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국정 운영을 위한 관료 조직이 등장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 ② 공공 부문을 효율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무엇을 제안 할 수 있는가?
- ③ 거버넌스 이론에 대한 본격적 논의는 어떠한 계기로 촉발되었는가?
- ④ 위계 서열 중심의 조직 문화는 정책 결정 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 ⑤ 시장 정부 모형에서 공공 부문에도 민간 부문의 기법을 활용해야 한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

6. 밑글을 바탕으로 <보기 1>의 상황을 이해한 반응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 2>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1>

세계 경제에 과잉 생산이 지속됨에 따라, 전통적 관료제하의 ○○국 정부는 자국의 소비력을 높이기 위해 재정 투입, 금리 조정 등 대중적 위기 처방을 제시하였으나, 이로 인한 결과는 국가의 채무 과잉, 즉 과잉 부채였다. 이런 상황에서 산업 성장 둔화에 따라 기업은 정보화, 기계화를 통해 인건비를 절감하려 하였으며 이는 실업률 상승과 소득 불평등의 심화로 이어졌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정부의 미흡한 대처 등으로 인해 ○○국 정부는 거버넌스를 활용해 전통적 관료제 중심의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한 개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직면하게 되었다.

<보기 2>

㉠ 시장 정부 모형에서는 관료들에게 성과에 따른 보상을 통해 동기 부여를 하는 것이 ○○국 정부를 효율화하는 개혁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보겠군.

㉡ 참여적 정부 모형에서는 ○○국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일선 관료나 시민들의 참여를 통한 협의를 중시하는 것이 개혁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보겠군.

㉢ 신축적 정부 모형에서는 ○○국이 그동안의 정책 기조와 결정 방식을 벗어나 문제 해결에 적합한 조직을 구성함으로써 창의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개혁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보겠군.

㉣ 탈규제적 정부 모형에서는 ○○국이 기존의 관료 조직 개선에 초점을 두고, 조직 개편을 통해 관료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도출함으로써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개혁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보겠군.

- ① ㉠
- ② ㉠, ㉡
- ③ ㉠, ㉡, ㉢
- ④ ㉠, ㉡, ㉣
- ⑤ ㉠, ㉡, ㉢, ㉣

7. 밑글과 <보기>를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관료 조직이 발전한 이유는 관료 조직이 정책 결정에 필요한 전문성과 지식의 우월성을 갖추려 노력했기 때문이며, 완전하게 발전된 관료 조직은 정교함, 속도, 명쾌함, 기록에 대한 지식, 지속성 등이 최적의 수준에 도달한다. 관료 조직은 안정된 직책과 위계 서열, 직책별로 마련된 규칙 및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가를 전문적, 능률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국가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 비밀리에 정보를 독점하여 공무상 기밀을 만들고 지식을 축적할 수 있다.

- ① 시장 정부 모형에서는 관료의 정보 독점이 비효율성을 발생시킨다고 본 반면, <보기>에서는 관료의 정보 독점이 국가의 능률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군.
- ② 참여적 정부 모형에서는 위계 서열 중심의 조직 문화를 부정적으로 본 반면, <보기>에서는 관료 조직의 위계 서열이 국가를 전문적으로 운영하도록 한다고 보고 있군.
- ③ 신축적 정부 모형에서는 임시 고용 제도의 확대를 주장한 반면, <보기>에서는 관료 조직의 안정된 직책이 국가를 전문적, 능률적으로 운영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 있군.
- ④ 신축적 정부 모형에서는 관료의 창의적 정책 제안을 위해 정규적 조직의 확대를 대안으로 강조한 반면, <보기>에서는 정책 결정을 위해 관료 조직이 전문성과 지식의 우월성을 갖추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군.
- ⑤ 탈규제적 정부 모형과 <보기>에서는 모두 관료 조직이 정책 결정에 필요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 있군.

8. 문맥을 고려할 때, ㉠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국가 간 타협과 조정에 의해 구성된 관계
- ② 정부 운영 방식을 바꾸기 위해 시장의 개입을 배제하는 관계
- ③ 정부와 민간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서열 중심으로 조직된 관계
- ④ 국가, 시장, 시민 사회가 자율성을 바탕으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
- ⑤ 정부 조직의 안정성, 영속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행위자가 협력할 수 있는 개방적 관계

[9~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929년 미국 주식 시장의 붕괴를 기점으로 전 세계로 확산된 대공황이 경제학에서 가지는 의미는 빅뱅(Big Bang)이 물리학에서 가지는 의미에 비유되기도 한다. 산업 혁명 이후 서구 경제는 여러 차례의 경기 침체를 경험하였지만, 대공황은 불황 정도가 유례없이 깊고 오랜 기간 지속되었다는 점에서 이전의 경기 침체와는 구별된다. 주식 시장의 붕괴는 대공황 이전에도 여러 차례 관찰되던 현상이므로 그 자체가 대공황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는 점과 대공황의 전개 및 회복 과정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다. 주식 시장 붕괴에 이은 은행 파산과 디플레이션, 보호 무역주의의 대두에 따른 국제 교역 감소 등의 연쇄적인 과정을 거치면서 통상적인 경기 침체가 대공황으로 확대되었다는 것이다. 대공황의 원인과 관련해서도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경제 구조의 불안정성과 경제 정책의 실패가 대공황을 초래하였다는 것에는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져 있으나, 불안정한 경제 구조의 주요 원인에 관해서는 통화 가설과 지출 가설로 구분되는 두 가지 가설이 존재한다.

㉠ 통화 가설을 지지하는 학자들은 대공황의 원인을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의 통화 정책 실패에서 찾고 있다. 연준이 1920년대 중반까지 공개 시장에서 국채 매입을 통해 통화량을 확대함에 따라 주식 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되었고 전반적인 물가와 더불어 주식과 같은 자산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하였다. 당시의 세계는 국제 통화 제도로 금 보유고가 증가할 경우 통화량도 같이 증가시켜 자국 화폐와 금의 교환 비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금 본위제를 채택하고 있었다. 수출 증가에 따른 해외로부터의 지속적인 금의 유입으로 금 보유고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 시장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 연준이 공개 시장을 통해 국채를 매각하는 긴축 통화 정책을 실시하면서 통화량이 감소하고 이자율은 높아짐에 따라 대공황이 초래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통화량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연준은 상업 활동에 사용된 어음만을 인수하여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진성 어음주의를 통화 정책 기조로 삼고 있어 상업 활동이 위축되는 대공황 시기에 통화가 오히려 줄어들게 함으로써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진성 어음주의하에서의 통화 정책은 경기 순응적인 정책으로, 불황기에는 통화량을 감소시켜 시장 유동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동되었던 것이다. 통화 긴축으로 인해 주식 시장이 폭락하고 기업이 파산하면서 일부 은행이 도산되고 있음에도 당시 연준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이후 은행이 연쇄 도산되었고 이는 통화량을 추가적으로 위축시킴으로써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을 야기하고 실물경제의 악화를 초래하였다. 이 가설에서는 연준이 국채를 매입하는 공개 시장 운영을 통해 통화량을 시장에 적극적으로 공급하였다면 통상적인 경기 침체가 대공황으로까지 이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금융 시장의 작동 원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연준의 정책 실패를 대공황의 근본적인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

한편 ㉡ 지출 가설을 지지하는 학자들은 주식 시장 붕괴에 따른 내구재에 대한 소비 감소가 미국 대공황의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미국은 제1차 세계 대전 당시 유럽에 군수 물자를 판매함으로써 엄청난 부를 축적하는 한편 설비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시켜 나갔다. 1920년대 말 미국 경제가 심각한 과잉 설비 상태에 처해 투자 기회가 소진되면서 실물 투자보다는 오히려 주식과 같은 금융 자산에 대한 투자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시장의 내재적 불안정성에 따른 예기치 못한 요인으로 주식 시장이 붕괴되면서 미래 소득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함에 따라 내구재 소비가 감소하게 되고 생산된 제품이 재고로 남게 되자 기업 투자 역시 감소하게 되었다. 기업의 투자 감소는 생산에 필요한 노동에 대한 수요 감소에 따른 실업 증가를 야기해 노동자들의 소득이 줄고 소비할 수 있는 구매력을 감소시켜 민간의 소비 수요 감소로 이어졌다. 소비 수요 감소는 디플레이션과 더불어 기업 파산을 유발하고 이는 가계 및 기업 대출의 부실로 은행들의 대출 원리금 회수가 어려워지고 이는 연쇄적인 은행 파산으로 이어지면서 결국 대공황이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다. 이 가설에서는 미국에서 발생한 대공황이 전 세계로 확산된 원인으로 당시의 국제 통화 제도였던 금 본위제를 들고 있다. 대공황 발생 이후 미국은 보호 무역을 통해 해외로부터의 수입을 줄이고 외국에 빌려준 돈을 금으로 환수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의 금 보유고는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금 본위제하에서는 금과의 교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들 국가들은 줄어든 금 보유고만큼 자국의 통화량을 줄이게 되었고 이는 결국 국내적으로 디플레이션과 경기 침체를 유발하면서 미국의 대공황이 전 세계로 전파되는 과정을 거쳤다고 설명한다. 이들은 대공황의 원인이 결국 민간의 소비 수요의 감소에 따른 것이므로 정부가 적자 재정을 통해 민간 수요를 진작하고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팽창적인 재정 정책을 실시하였다면 대공황을 극복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와 더불어 각국 통화 당국의 재량적이고 신축적인 통화량 조절을 위해서는 국제 통화 제도의 개편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아직까지도 대공황의 원인에 대해 상이한 가설이 대립하는 이유는 여전히 그 원인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공황의 원인과는 별개로 대공황이 남긴 유산은 명확하다. 대공황의 회복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에 대한 민간의 인식이 변화하였고, 이와 함께 경기 대응과 위기관리를 위한 정부의 개입과 간섭이 정당화되면서 공공 부문이 확대되었으며, 그동안 신봉되어 왔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시장 기능을 지지하는 자유방임주의는 수정되지 않을 수 없었다. 또한 금융 위기를 예방하고 수습하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의 적극적인 노력과 대응이 필요하다는 값비싼 교훈을 얻게 되었다.

9.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대공황으로 인해 디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기 시작하였다.
- ② 대공황은 이전 시기의 통상적인 경기 침체에 비해 침체 정도가 크고 지속 기간도 길었다.
- ③ 연준의 공개 시장을 통한 국채 매입은 통화량을 증가시켜 이자율을 낮추는 요인이 된다.
- ④ 통화 가설은 통화량 확대를, 지출 가설은 재정 지출 확대를 대공황의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⑤ 대공황 이전에는 경기 침체에 대응하여 정부가 개입하는 것보다는 시장 자율에 맡기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10.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 보 기 > —

경제학자 A는 통화량이 감소하게 되면 이자율이 상승하였을 것인데 대공황 당시 자료에서는 이자율 상승이 관찰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통화 가설을 부정하는 견해를 제시하면서 경제 변수를 이해하는 데 있어 명목 변수와 실질 변수를 명확히 구별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는 화폐 단위로 표시된 명목 통화량이 감소한 것은 분명하나 디플레이션으로 인해 실제 물가 역시 하락하고 있어 명목 통화량을 실제 물가로 나눈 화폐의 구매력을 나타내는 실질 통화량은 감소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실질 이자율 역시 상승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계산된 실질 이자율은 명목 이자율에 실제 인플레이션율을 차감한 사후적 실질 이자율로서 실물 경제에서 투자와 소득을 실제로 결정하는 사전적 실질 이자율과는 개념적으로 구분된다.

다른 이자율보다는 사전적 실질 이자율이 실물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중시하는 통화 가설에 따르면 통화량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명목 이자율이 상승하지 않더라도, 사전적 실질 이자율의 인상으로 경기 침체가 발생할 수 있다. 명목 이자율은 사전적 실질 이자율에 미래에 예상되는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더한 것이다. 그러므로 통화량 감소로 물가 하락이 예상되어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음수(-)인 상황, 즉 디플레이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전적 실질 이자율은 명목 이자율을 상회하게 된다. 사전적 실질 이자율의 상승은 투자를 줄여 생산 및 소득의 감소를 가져오며 그 결과 경기 침체를 초래한다. 따라서 통화 가설의 성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실질 통화량이 아니라 기대 인플레이션율의 측정을 통해 사전적 실질 이자율의 움직임을 살펴보아야 한다.

- ① 통화 가설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명목 이자율 상승이 필수적인 요건이다.

- ② 통화 가설을 지지하는 학자들은 대공황 당시에는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실제 인플레이션율을 상회하였다고 주장할 것이다.
- ③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영(0)이라면, 명목 이자율의 하락은 투자 및 소득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다.
- ④ 디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가 존재할 경우, 명목 이자율은 사전적 실질 이자율을 상회할 것이다.
- ⑤ 경제학자 A의 주장이 타당하려면 대공황 당시 명목 이자율의 상승 폭이 기대 인플레이션율의 상승 폭과 같거나 그보다 더 커야 한다.

11.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가) ㉠에서는 디플레이션이 대출 부실에 따른 은행의 연쇄적인 파산을 야기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에서는 금 본위제는 통화 당국의 통화량 조절을 어렵게 함으로써 재량적인 통화 정책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본다.

(다) 주식 시장 붕괴의 원인에 대해 ㉠은 정책의 실패로 보는 반면, ㉡은 시장 내부의 불안정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라) ㉠은 ㉡과 달리 금 본위제가 미국의 디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요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 ① (가), (나)
- ② (가), (다)
- ③ (나), (다)
- ④ (나), (라)
- ⑤ (다), (라)

12. 윗글을 읽고 대답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대공황은 이전의 경기 침체와 비교해서 어떤 측면에서 차별성을 가지는가?
- ② 통화 가설은 대공황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어떤 통화 정책이 걸림돌로 작용하였다고 주장하는가?
- ③ 통화 가설은 미국의 대공황이 전 세계로 확산되는 경로를 무엇이라고 설명하는가?
- ④ 지출 가설은 대공황 직전에 주식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진 원인을 무엇이라고 설명하는가?
- ⑤ 지출 가설에서는 미국의 대공황이 어떤 경로를 통해 국제적으로 확산되었다고 설명하는가?

[13~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4차 산업 혁명으로 인해 디지털 경제의 핵심 자원으로 부상하게 된 데이터는 일종의 재화로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 우선 데이터는 정보로서, 특정 용도에 사용되면 더 이상 그 외의 다른 용도에는 사용할 수 없는 대부분의 일반적 재화와는 달리 한번 사용된 후에도 다른 용도로 다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비경합적인 성격을 띤다. 또한 최종적으로 소비되는 재화가 아니라,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데 투입된다는 점에서 자본재로 간주된다. 복제에도 거의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이를 다양한 경제 주체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면 사회 전체적으로 재화와 서비스 생산 비용이 하락하므로 데이터의 공유는 사회 전체의 효용을 증가시킬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중요한 데이터는 인간의 행동에 관련된 것으로, 최근 빅 데이터의 가치가 부각되는 이유는 결국 이것이 인간 행태에 관한 개인 정보들을 대량 집적해 놓은 것이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인공 지능을 기반으로 하는 4차 산업 혁명 사회에서 인공 지능 시스템의 훈련을 위해서는 새로운 데이터가 ㉓ 끊임없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데이터의 한계 효용은 감소하지 않는 반면, 데이터 수집을 위해 막대한 투자 비용을 필요로 하는 인프라 구축 단계가 끝나면 추가적인 한계 비용은 점점 낮아져 0에 수렴한다. 따라서 데이터를 수집·생성하여 빅 데이터를 구축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빅 데이터는 무제한 생성하는 것이 최적화된 생성이다.

데이터의 재산적 가치가 높아지면서 다른 지식 재산처럼 데이터에 대해서도 배타적 지배권 및 소유권을 인정하려는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우선 ㉔ 데이터 보유자에게 데이터 소유권을 인정하자는 주장이 있다. 현행법상 저작권법이나 영업 비밀 보호법에 의해서는 데이터 보유자가 포괄적인 보호나 배타적 지배권을 주장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의 데이터를 다량으로 수집하고 축적해 이익의 기반으로 삼는 대기업과 같은 빅 데이터 보유자에게 데이터 소유권을 인정한다면, 데이터의 합법적 유통에 기여하고 데이터 생성에 대한 투자 유인이 촉진될 수 있다는 전망이 가능하다. 그러나 빅 데이터가 지닌 막강한 경쟁력으로 인해, 데이터를 유통함으로써 ㉕ 치러야 할 비용이 유통으로 인해 얻는 이익보다 클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데이터가 유통되지 않을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유통을 촉진하기 위해 인정된 데이터 소유권이 거래 비용을 일으켜 오히려 데이터 거래의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 결국 데이터 소유권은 이미 빅 데이터를 축적한 기업의 승자 독식 현상이 강화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이와 달리 ㉖ 데이터의 소유권이 빅 데이터의 정보 주체, 즉 빅 데이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개인 정보의 생산자들에게 있다고 보는 움직임도 존재한다. 개인 정보는 현행법상 각 정보 주체에게 자신의 개인 정보를 통제할 권리를 부여하는 개인 정보 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빅 데이터 수집 및 이용과 해당 법 간의 긴장 관계가 생겨나는데, 이 법은 개인의 자기 정보 결정권을 보장할 뿐 개인이 자신의 개인 정보로부터 발생하는 경제적 수익을 통제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빅 데이터가 갖는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여, 사람들이

특정 기업의 플랫폼을 사용하면서 개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데이터 노동으로 규정하고 그 정보의 제공자에게 경제적 가치의 일부를 귀속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이다. 이는 개인 정보 제공자를 데이터 생산자이자 소유자로 간주하는 것으로, 개인 정보가 ㉗ 지닌 빅 데이터로서의 가치를 인식하지 못한 소비자가 적정하지 않은 대가를 받고 개인 정보를 넘김으로써 빅 데이터를 수집, 축적한 기업에 부가 집중되는 현상에 대한 비판적 의식이 깔려 있다.

그러나 소비자가 적정하지 않은 대가를 받는다는 점은 데이터 소유권의 인정과는 상관이 없으며, 오히려 정보 주체의 데이터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은 데이터 보유자의 그것을 인정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래 비용을 높일 가능성이 크다. 또한 소유권이나 배타적 지배권을 인정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데이터의 생산 유인을 ㉘ 높이기 위해서인데 빅 데이터에 포함된 개인 정보는 일상생활의 기록에 가까운 것으로 소유권의 인정 여부와는 상관없이 데이터의 생성과 양은 유사하게 지속될 것이라는 점에서, 정보 주체의 데이터 소유권을 인정하자는 주장은 한계를 보인다.

데이터는 그 특성상 여러 경제 주체들에게 공유되는 것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효용을 증가시킨다는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이미 빅 데이터 독점 현상이 ㉙ 두드러진 상황에서 데이터를 자발적으로 유통시킬 유인이 부재하다는 것 또한 분명하다. 효율적인 데이터 경제 구축을 위해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빅 데이터를 공개하거나, 특정 플랫폼에 집적된 자신의 데이터를 이동시킬 수 있는 권리를 정보 주체에게 보장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빅 데이터의 유통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 등이 현재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13.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문제 상황의 원인을 기준으로 다양한 해결책을 유형화하고 있다.
- ② 대상의 특징을 다 각도로 살펴보고 변모의 양상을 설명하고 있다.
- ③ 상반되는 주장의 한계와 함께 이를 보완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 ④ 사회적 배경과 함께 대상에 대한 인식의 변화 과정을 밝히고 있다.
- ⑤ 전문가의 이론을 중심으로 대상의 경제적 효용을 구체화하고 있다.

14.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데이터를 제외한 대부분의 일반적 재화는 경합적인 성격을 띤다.
- ② 자본재는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데 투입되는 재화를 가리킨다.
- ③ 현행 저작권법과 영업 비밀 보호법은 데이터 보유자의 데이터 소유권을 보장하지 못한다.
- ④ 현행법상 개인 정보 보호법은 각 정보 주체에게 개인 정보를 통제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 ⑤ 한계 비용과는 무관하게 한계 효용이 감소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빅 데이터의 무제한 생성이 기업에 유리하다.

15.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과 ㉡은 모두 현행법의 한계를 주장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
- ② ㉠과 ㉡은 모두 실행될 경우 부작용이 일어날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다.
- ③ ㉠에 대한 비판적 견해는 ㉡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으로 이어진다.
- ④ ㉠과 달리 ㉡은 거래 비용을 일으켜 궁극적으로 데이터 거래의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
- ⑤ ㉡과 달리 ㉠은 정보 주체로서의 개인이 아닌 기업의 이익을 위해 기능할 가능성이 높다.

16.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 ㉠ “A라는 회사가 현재의 유통 사업으로 유의미한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A의 가치가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A의 주력 사업이 뭐냐고 물으면 많은 사람들은 유통보다 A의 실시간 데이터 수집 능력에 더 큰 관심을 둡니다. 데이터는 미래의 자본이라고도 하잖아요. 이 커머스*가 가장 발달한 나라의 고객, 쇼핑, 물류 데이터와 그 흐름을 매년 1조 원 비용으로 사들일 수 있다면 오히려 이득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 ㉡ 대형 포털 사이트 B에서는 B에 새로이 가입하여 14일간 매일 참여하면 3일차, 10일차, 14일차에 총 16,000원에 달하는 현금성 포인트를 지급하는 이벤트를 개최하였다. 그러나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는 참여자 수로 인해 이벤트 사흘 차를 기준으로 지급해야 하는 포인트가 90억 포인트에 달하게 되자, B는 이벤트를 사흘 만에 종료해 참여자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포인트를 지급받기 위해 B의 B페이 서비스에도 가입해야 했던 가입자들은, 자신들이 추가적으로 제공한 개인 정보와 관심사 관련 데이터가 해당 포털 사이트의 이윤 추구에 이용되었다는 점을 알고 더욱 분노하였다.

*이 커머스(E commerce): 컴퓨터 통신이나 인터넷을 이용해서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전자 상거래.

- ① ㉠에서 ‘이 커머스가 가장 발달한 나라의 고객, 쇼핑, 물류 데이터와 그 흐름’에 대한 진술은 인간 행태에 관한 개인 정보들을 대량 집적한 것이라는 빅 데이터의 특징과 관련지을 수 있다.
- ② ㉠에서 데이터의 수집이 실시간으로 수행된다는 것은 새로운 데이터를 끊임없이 요구하는 4차 산업 혁명 사회의 특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③ ㉠에서 매년 1조원의 비용을 들여도 이득이 된다는 언급은 결과적으로 빅 데이터 축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그 수집과 축적에 필요한 비용을 넘어선다는 인식에 기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④ ㉡에서 대형 포털 사이트 B가 이벤트를 사흘 만에 종료한 것은 데이터의 유통으로 인해 얻게 될 이익을 보장할 정도로 데이터가 수집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 ⑤ ㉡에서 분노한 가입자들은 자신들이 정보 주체로서 이벤트 참여를 위해 제공한 개인 정보와 관심사 관련 데이터에 대한 생산자이자 소유자라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17.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부단히 ② ㉡: 부담해야 ③ ㉢: 보유한
- ④ ㉣: 제고하기 ⑤ ㉤: 중시되는

[18~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신(新)박물관학’이라는 용어가 알려지게 된 것은 피터 버고의 『신박물관학』이라는 저서에 의해서이다. 이 책에서 버고는 박물관학이 박물관 전문가들에게 특화된 영역이라는 인식을 넘어, 박물관학의 대상이 사람들의 관심사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특히 버고는 박물관의 행정, 관리, 운영과 관련된 방법론에 집중하고 연구하는 학문을 ‘구(舊)박물관학’이라고 일컫고, 구박물관학에서는 박물관의 목적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점을 비판하면서 박물관의 목적에 대해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학문으로서 ‘신박물관학’을 주창한다. 박물관에 있는 전시품을 보존하거나 관리하는 데 주력하는 것이 아니라, 박물관의 사회·문화적 역할을 연구하는 데 집중하자는 것이다.

버고로 대표되는 신박물관학의 주창자들은 박물관 르네상스, 즉 박물관 건설 붐을 통해 박물관이 전시품 보존의 목적을 수행하는 특수 시설이라는 제한된 의미에 머물지 않고 사회 변동에 따라 변화하는 취향과 가치를 담아내는 문화 기관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음이 드러났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1980년대의 영국의 박물관은 대형 쇼핑몰이나 놀이공원과 경쟁하면서 수익성이 높은 전시를 개최하고 박물관 안에 상점을 들이는 등 변화를 도모하였다. 구박물관학자들은 박물관이 쇼핑몰이나 놀이공원처럼 여겨진다는 것은 박물관이 표방하는 고급문화의 가치를 파괴하는 것이라며 극렬하게 비판했지만, 신박물관학자들은 박물관의 관람객을 소비자로 간주하는 상업화 경향은 사회 변동에 따른 자연스러운 흐름으로서, 박물관을 배타적인 고급 문화의 공간이 아니라 대중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이러한 변화는 신박물관학자들에게 ㉠ 박물관이 ‘사회적 은유’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근거로 여겨진다.

신박물관학자들은 더 이상 박물관에는 구박물관학자들이 기대하고 상상하는 표준화되고 전형적인 관람객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박물관을 지탱해 온 가치 체계의 해체를 주장하였다. 박물관을 기득권의 의례와 가치를 교육하는 기능을 하는 기관, 몇몇 연구자들과 컬렉터들을 위한 보관 창고로 인식하면서 전시품의 보존이나 관리 등 박물관의 방법론에 대해 집중하는 구박물관학을 변화해야 할 대상으로서 규정할 것이다. 나아가 신박물관학자들은 구박물관학자들의 박물관에 대한 고정 관념을 극복하고 박물관의 사회·문화적 역할을 연구하는 근본적인 박물관학을 마련할 것을 강조하였다. 박물관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박물관이 사회 변동을 담아내는 방식에 관심을 가지고 박물관에서 가시화되거나 전시되는 부분만이 아니라 박물관에 관련된 역학 관계, 즉 박물관의 운영 주체나 박물관의 관람객 등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박물관의 사회·문화적 역할을 제고하는 데 힘써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신박물관학자들은 우선 누가 박물관을 통제하고 있는지, 그들이 어떤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박물관을 운영하는지 관심을 가지는 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특권 계층의 사적 컬렉션이 공공 박물관으로 전환되어 기득권의 의례와 가치를 답습하게 하는 사례를 언급하면서 박물관이 소수 사람의 전유물이 아닌, 변화하는 사회의 특성과 가치를 능동적으로 반영하는

사회·문화적 기관으로 성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박물관의 전시품은 스스로 말해야 한다.’라는 말은 특정한 가치와 이데올로기를 배제하고 사회·문화를 객관적으로 비추어 주는 거울이라는 박물관의 역할을 강조하는 신박물관학자들의 시각을 잘 보여 준다. 한편 신박물관학자들은 박물관과 관람객 사이에 개방적이고 상호적인 관계 형성을 위해서 큐레이터의 역할 변화를 강조하기도 하였다. 즉 큐레이터가 특권 계층이나 기득권을 위한 전시 기획 전문가에서 벗어나 박물관을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 문화 기관으로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박물관 외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박물관 내에서 사회·문화를 보여 주는 ‘저자’로서 발언할 수 있도록 하여, 박물관을 소수의 기득권이 아닌 다수의 대중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는 박물관을 사회 구성원 모두의 대화 공간으로 변모시켜 다원적이고 차별화된 발언들이 그 안에서 조화를 이루며 공존하게 하자는 말로 평가된다.

18. 신박물관학자의 관점에 부합하는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박물관과 관람객 사이의 상호적인 관계 형성 방법에 대해 고민한다.
- ② 박물관을 소수의 전유물이 아닌 다수를 위한 문화적 기관으로 인식한다.
- ③ 특정한 영역에 국한하지 않고 사람들의 관심사 전반으로 연구 대상을 확장한다.
- ④ 박물관의 운영 주체가 가지고 있는 이념이 박물관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분석한다.
- ⑤ 박물관을 대중적 공간으로 만드는 것보다 박물관을 고급문화를 위한 특수 공간으로 만드는데 집중한다.

19. ㉠의 의미를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박물관이 사회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순수 예술 기관이 되었다는 뜻이다.
- ② 박물관이 관람객의 교양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하여 관람객을 표준화시켰다는 뜻이다.
- ③ 박물관이 사회 변동에 따라 변화하는 취향과 가치를 보여 주는 역할을 맡게 되었다는 뜻이다.
- ④ 박물관이 박물관의 관리나 운영에 대한 학문을 연구하는 공간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뜻이다.
- ⑤ 박물관이 시장 주도의 경제에 대한 반동으로 생겨난 새로운 문화 제도로 공인되었다는 뜻이다.

20. <보기>의 관점에서 ㉡에 대해 할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픽처레스크(Picturesque)’는 ‘그림과 같은’, ‘그림이 될 만한’이라는 뜻으로, 실제 자연 풍경보다 더 자연인 것처럼 보이는 풍경화의 효과를 가리키는 말이다. 그런데 풍경화가 어원적으로 틀(frame)을 의미하며 풍경화 속에는 이미 자연을 구획 짓는 인공성이 내재해 있고 풍경화 속의 자연은 인간의 시각에 의해 재단된 것이라는 점이 강조되면서, 픽처레스크는 재현된 자연이 실제 자연을 바라보는 틀(frame)과 준거(reference)로서 작용하는 것을 가리키게 되었다. 박물관에 대해 연구하는 몇몇 학자들은 박물관 안에 놓여 있는 전시물이란 누군가에 의해 선택된 것으로서, 풍경화 속의 풍경과 같이 픽처레스크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박물관은 여전히 ‘체계모니적 의례가 집행되는 극장’이라는 것이다.

- ① 박물관의 전시가 대중들을 계몽하는데 효과를 발휘하기는 어렵다.
- ② 박물관의 전시가 난해하거나 현학적인 내용을 주제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
- ③ 박물관의 전시에 대한 평가는 관람객이 아닌 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 ④ 박물관의 전시물은 특정한 가치를 담고 있을 수밖에 없어 객관적이기 어렵다.
- ⑤ 박물관의 전시물은 가치와 이념이 배제되어 있는 가시적 정보로서만 의미가 있다.

21.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프랑스 대혁명을 통해 프랑스는 인류 발전을 위한 문명화의 임무를 담당하는 국가로 성장하고자 하였는데, 루브르 박물관은 이러한 프랑스의 목표를 실현하는 기관으로서 기능하였다. 본래 루브르 박물관은 프랑스 왕실의 소장품을 전시하는 공간이었는데, 제국주의적 이념하에 인류의 중심이 되겠다는 국가적 포부를 실현하고 막강한 국가 권력을 홍보하는 기관으로 발전하였다. 이 과정에서 프랑스는 여러 국가를 침략하여 그곳의 문화재를 약탈하기도 하였다. 이런 프랑스를 견제하기 위해 영국은 그리스에서 고대 문물을 약탈해 대영박물관으로 가져왔다. 하지만 20세기에 일어난 제국주의의 쇠퇴와 탈식민화는 이러한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이후 루브르 박물관과 대영박물관은 놀이공원처럼 수많은 인파가 모여드는 관광지로 명성을 날리게 되었는데, 일부 정치·경제학자들은 이를 ‘치부(恥部)의 경제’라고 일컬으며 이제 루브르 박물관과 대영박물관은 역사적 치부를 경제적 이득으로 환원하는 기관일 뿐이라고 평가하기도 하였다.

- ① 구박물관학자들은 루브르 박물관과 대영박물관에 소장된 문화재를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해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겠군.
- ② 구박물관학자들은 루브르 박물관과 대영박물관이 수많은 인파가 모여드는 놀이공원처럼 여겨지게 된 것에 대해 박물관이 지닌 고급문화로서의 가치를 퇴색시킨다는 점을 들어 부정적으로 평가하겠군.
- ③ 신박물관학자들은 프랑스가 다른 나라의 문화재를 약탈하여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한 것에 대해 특정한 가치나 이념을 홍보하는 기관으로 박물관을 이용한 것이라고 비판하겠군.
- ④ 신박물관학자들은 프랑스 왕실의 소장품을 전시하던 루브르 박물관이 제국주의적 이념을 드러내는 박물관으로 변모한 것에 대해 박물관이 전시품 보존이라는 고정적 목적만을 위해 존재하는 특수 시설이 아님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하겠군.
- ⑤ 신박물관학자들은 루브르 박물관과 대영박물관이 치부를 경제적 이득으로 환원하는 기관으로 평가받는 것에 대해 박물관을 다원적 공간으로 변모시키더라도 막강한 국가 권력을 상징하는 기관으로서 박물관의 가치는 유지되어야 한다고 말하겠군.

[22~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정에서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기 위해 가계부를 쓰듯이 국가도 외국과의 교역에 따른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기 위해 통계를 작성하게 된다. 일정 기간 동안 한 국가의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상품, 서비스 및 자본 등 모든 경제적 거래를 종합하여 기록한 통계가 국제 수지표이다. 여기서 일정 기간은 통상 1년으로 설정된다. 국제 통화 기금(IMF)에서 국제 수지 통계의 포괄 범위 및 평가 기준을 정하고 각국은 여기에 따라 국제 수지표를 작성하고 있는데, 국제 통화 기금은 대외 거래의 환경 변화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에는 이 기준을 개정해 오고 있다. 현행 국제 수지표는 상품 및 서비스 등을 수출한 금액에서 수입한 금액을 차감한 경상 수지와 자본 이전 등을 기록하는 자본 수지, 그리고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금융 거래를 기록하는 금융 계정으로 분류된다. 금융 계정에서는 거주자가 해외의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한 금액을 자산으로, 비거주자가 국내의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한 금액을 부채로 기록한다. 금융 계정의 자산 항목에는 자산의 증가액에서 감소액을 차감한 순자산 증가액을, 부채 항목에는 부채의 증가액에서 감소액을 차감한 순부채 증가액을 각각 기록하며, 금융 계정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금융 계정 순자산으로 인식한다. 국제 수지표에는 기초 통계의 오류나 통계 작성상의 실수 등에 따른 약간의 오차와 누락이 존재하지만 이를 무시한다면, 경상 수지와 자본 수지의 합에서 금융 계정 순자산을 차감하면 '0'이 되도록 국제 수지표가 작성된다.

국제 수지표에 기록되는 대외 거래는 국내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기준으로 경제적 거래를 기록하므로 거주성과 소유권의 변동 여부가 중요하다. 여기서의 거주성은 국적보다는 거래 당사자의 주된 경제적 이익의 중심이 되는 나라가 어디냐에 따라 정해진다. 통상적으로 개인이 1년 이상 어떤 나라에서 경제 활동 및 거래를 수행하는 경우에 주된 경제적 이익의 중심이 그 나라에 있다고 본다. 즉 개인이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본국을 떠나 해외에서 경제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본국의 거주자로 보는 반면, 해외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제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분류된다. 기업의 경우에는 어떤 국가에서 설립되고 법적으로登記되어 법인격을 획득한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한다. A국에 본사를 둔 기업이 B국에 설립登記한 현지 법인은 비록 실질적인 경영권은 A국의 본사에 있다고 하더라도 A국의 입장에서는 비거주자로 분류된다. 또한 거주자가 해외의 비거주자로부터 상품을 구입하고 이 상품을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타국에 판매하는 경우라도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에 상품의 소유권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이므로 이는 상품 수출입에 해당하게 된다.

한 국가가 1년 동안 비거주자와 거래를 하고 나면 국내 거주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외환 규모에 변동이 있기 마련이고, 이 변동은 나라 전체로 보면 대외 지급 능력의 변동을 가져온다. 1년 동안에 발생한 거래를 기록하는 국제 수지표와는 달리 연말 시점에서 국내 거주자가 해외에 보유한 대외 금융 자산(또는 대외 투자)과 비거주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대외 금융 부채(또는 외국인 투자) 및 대외 금융 자산에서 대외 금융 부채를 차감한 순대외 금융 자산의 잔액을 보여 주는 것이 국제 투자 대조표이다. 일반적으로 순대외 금융 자산이 증가하는 경우에 그 나라의 대외

지급 능력이 개선되었다고 한다. 국제 투자 대조표에서는 대외 금융 자산 및 대외 금융 부채의 연초 잔액에 거래 요인과 비거래 요인에 따른 기간 중 증감을 조정하여 연말 잔액이 작성된다. 거래 요인은 매매, 차입 등 실제 경제적 거래를 통하여 자산이나 부채의 가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로 국가 간 자금의 이동이 수반된다. 비거래 요인은 경제적 거래는 없으나 자산이나 부채가 시장에서 평가되는 가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로 자금의 이동은 수반되지 않는다. 이 요인은 환율이나 가격 변동 그리고 이외의 기타 변동으로 세분된다. 국제 투자 대조표는 국제 수지표와 마찬가지로 특정 통화를 기준으로 작성되므로 기준 통화 이외의 통화로 표시된 자산과 부채에서는 기준 통화의 대외 가치인 환율 변동에 따라 자산 및 부채의 시장 가치에 대한 평가가 변동한다. 한편 비거래 요인 중 가격 변동은 환율 이외의 가격 변수가 움직임에 따라 발생한 자산이나 부채 가치의 평가 변동을 의미한다.

국제 수지표의 금융 계정은 거래 시점에서의 실제 시장 가격으로 대외 거래를 작성하는 유량 통계인 반면, 국제 투자 대조표는 대외 금융 자산과 대외 금융 부채 잔액을 연말 시점에서 평가하여 기록한 저량 통계라는 점에서 이들 간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유량 통계와 저량 통계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 욕조에 물을 받을 때 수도꼭지에서 흐르는 물과 욕조 안에 고인 물을 상상해 보자. 수도꼭지에서 1분당 5리터의 물이 배출된다고 할 때 10분이 지난 시점에서는 욕조에 50리터의 물이 고이게 된다. 이 경우 욕조에 담겨 있는 '50리터'의 물이 저량이 되고 유입되는 '5리터/분'이 바로 유량이 되는 것이다. 만약 국제 투자 대조표가 작성되는 연초와 연말 시점 사이에 비거래 요인의 변동이 없다면 이 두 시점 간 국제 투자 대조표에 기록된 잔액의 차이는 국제 수지표의 금융 계정과 개념상 동일하게 된다.

이처럼 한 나라의 대외 지급 능력은 상품 및 서비스의 경쟁력에 기초한 경상 수지 흑자를 통한 외화 자산의 축적과 더불어 대외 금융 활동을 통한 투자 성과에 따라 결정된다. 경상 수지 흑자를 지속적으로 달성하였다고 하더라도 대외 금융 활동의 투자 실적이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진할 경우 순대외 금융 자산이 감소하여 대외 지급 능력이 악화될 수 있다. 이 경우 자국의 대외 신인도가 하락함에 따라 비거주자들이 국내 투자 자금을 회수할 경우 환율이 상승하여 자국 통화의 대외 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는 사실은 국제경쟁에서 산업 경쟁력과 더불어 금융 역량의 중요성을 절감하게 한다.

22.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경상 수지 흑자가 매년 지속하여 누적된 국가의 경우라도 국제 투자 대조표상 순대외 금융 부채 국가로 전락할 수 있다.
- ②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1년 이상 거주하면서 본국에 상품을 판매한 경우는 우리나라 경상 수지의 수출 항목으로 기재된다.
- ③ 국제 수지표상 금융 계정에 기록된 주식, 채권 등 대외 금융 자산의 가치는 연말 시점에서의 평가된 시장 가격으로 작성된다.
- ④ 기업의 경우 주된 경제적 이익의 중심이 되는 나라를 법적登記 여부로 판정하여 국제 수지 표상의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한다.

- ⑤ 국제 투자 대조표에서 대외 금융 자산 및 대외 금융 부채의 증감과 국제 수지표상의 금융 계정 간의 괴리가 발생하면 이는 비거래 요인의 변동에 의한 것이다.

23.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A국은 자국 통화인 달러화를 기준으로 국제 투자 대조표를 작성하고 있다. 순대외 금융 자산이 0을 유지해 오던 A국은 2023년에는 100억 달러의 경상 수지 흑자를 달성하였으며, B국 거주자는 향후 A국의 주식 시장이 호황을 맞을 것이라고 예상하여 자국 통화를 A국 통화로 환전한 50억 달러를 A국의 주식 시장에 투자하였다. A국은 경상 수지와 금융 계정을 통해 150억 달러가 유입되었는데, A국 거주자는 이를 C국 통화로 환전하여 C국의 주식 시장에 전액 투자하였다. 2023년에는 비거래 요인에 의해 시장에서 평가된 가치의 변동은 발생하지 않았다. 단, 각국의 주식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은 모두 자국 통화로 표시된다.

2024년에 A국의 경상 수지 및 금융 계정 순자산이 모두 0이라고 하자. A국의 주가는 예상대로 2배 상승한 반면 C국의 주가는 1/2배로 하락하였다. 또한 A국 통화의 대외 가치는, B국 통화에 대해서는 1/2배로 하락한 반면 C국 통화에 대해서는 2배 상승하였다. 한편 이 해에는 국가 간 자금 이동은 없었으며 주가와 환율 이외의 변동은 발생하지 않았다.

- ① 2023년도 A국의 국제 투자 대조표에는 대외 금융 자산이 150억 달러, 대외 금융 부채가 50억 달러로 기록되었을 것이다.
- ② 2023년에는 A국의 대외 지급 능력이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다.
- ③ 2024년도에는 A국의 순자산 증감액과 순부채 증감액이 같을 것이다.
- ④ 2024년도 A국 국제 투자 대조표상의 대외 금융 부채는 100억 달러로 기록되었을 것이다.
- ⑤ 2024년도 A국 국제 투자 대조표상의 대외 금융 자산은 75억 달러로 기록되었을 것이다.

24. 윗글을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거주자의 해외 주식 투자 증가를 위해서는 경상 수지 흑자는 필수적인 요건이다.
- ② 한 국가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경제적 거래는 국내 거래이므로 국제 수지표에 반영되지 않는다.
- ③ 가격 변동 이외의 비거래 요인 변동이 없다면, 국내 주가 하락은 대외 지급 능력을 개선시키는 요인이다.
- ④ 국제 투자 대조표의 거래 요인에 의한 순대외 금융 자산은 환율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국제 수지표상의 금융 계정과 괴리가 발생하게 된다.

- ⑤ 국내 본사가 해외의 A국에 설립 등기를 마친 현지 법인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해외의 B국에 설립 등기를 한 또 다른 현지 법인에게 되파는 경우는 국제 수지표에 반영되지 않는다.

25.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A)~(C)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보 기>

		국제 수지표				
		경상 수지				
		(A)				
국제 투자 대조표	-대외 금융 자산 (연초)	(B)	(비거래 요인)			-대외 금융 자산 (연말)
	-대외 금융 부채 (연초)		가격 변동	(C) 변동	기타 변동	-대외 금융 부채 (연말)
	-순대외 금융 자산 (연초)					-순대외 금융 자산 (연말)

- | | | | |
|---|-------|-------|-----|
| | (A) | (B) | (C) |
| ① | 금융 계정 | 자본 수지 | 환율 |
| ② | 금융 계정 | 자본 수지 | 주가 |
| ③ | 자본 수지 | 금융 계정 | 금리 |
| ④ | 자본 수지 | 금융 계정 | 환율 |
| ⑤ | 자본 수지 | 금융 계정 | 주가 |

26. 윗글로부터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보 기>

(가) 어느 해의 순대외 금융 자산이 음(-)의 값을 기록하였다면 이듬해에 순대외 금융 자산이 양(+)의 값을 가지기 위해서는 경상 수지 흑자는 필요조건이다.

(나) 국제 수지표에서 경상 수지와 자본 수지가 모두 흑자를 기록하여 양(+)의 값을 가질 경우 오차와 누락이 없다면 금융 계정 순자산 역시 항상 양(+)의 값을 가지게 된다.

(다) 국제 투자 대조표에서는 기준 통화와 자국 통화와의 환율만 고정되어 있으면 제3의 통화의 환율 변동에 의한 대외 금융 자산 및 대외 금융 부채의 가치 변동은 발생하지 않는다.

(라) 일국이 다른 국가에 가공용 원재료를 제공한 후 가공 후 가공품을 다시 돌려받는 경우, 이 상품의 소유권 변동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해당 상품 거래는 상품 수출입에서 제외된다.

- ① (가), (나) ② (가), (다) ③ (나), (다)
- ④ (나), (라) ⑤ (다), (라)

[27~3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선거 방송 보도는 불특정한 대중에게 정치적 메시지를 대량으로 전달할 수 있는 매체라는 점에서 선거 운동의 중요한 도구이다. 선거 방송 보도가 선거 운동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 이유는 대중에게 쉽게 선거 운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대중의 정치의식 수준이 높거나 낮은 것에 영향을 덜 받으면서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선거 방송 보도는 선거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가령 후보자나 정당이 선거 운동의 의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선거 방송 보도에 따라 의제가 만들어지는 것이 있다. 이는 미디어에 의해 ㉠ 선거 운동 의제가 통제되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선거 방송 보도에는 ㉡ 선거 운동 기간 중에 특정 정치인에 대해 보도하는 것, ㉢ 부정식 뉴스 보도의 증가, ㉣ 본질적 이슈 보도 대신에 선거 운동에 대한 보도 증가와 같은 현상들이 나타나며, 이러한 현상과 관련한 선거 방송 보도로는 개인화 보도, 부정식 보도, 경마식 보도가 있다.

개인화 보도는 정치인의 공적 영역뿐 아니라 사적 영역에 대해서도 보도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보도에서는 정치인 개인에 대한 것은 강조하는 반면에 정당, 조직, 제도에 대한 초점은 감소한다. 예를 들어 방송 보도가 정치적 이슈의 내용, 배경 등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그 이슈를 놓고 정치 싸움을 벌이는 정치인 개인에게 집중하는 것이다. 개인화 보도에서도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정치인이나 정당 지도자들에 대해 초점을 두는 보도를 지도자화 보도라고 한다.

부정식 보도는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 정부 등을 부정적으로 보도하는 것이다. 이러한 보도에서는 불법부정 선거, 흑색선전, 후보자나 정당의 비리 등을 보도하거나 폭로·비방·갈등 관계와 같은 부정적인 측면을 보도한다. 부정식 보도는 해석적 저널리즘과 결합한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해석적 저널리즘은 특정사안에 대한 사실을 예시로 활용하면서 언론이 그 사안에 대해 분석하고 해석하는 것이다. 가령 특정 후보의 비리에 대해 경쟁 후보자 또는 상대측 정당의 입장을 보도하면서 비리 내용을 해석·분석하는 내용이 더해지는 것이다. 이 보도는 유권자에게 정치에 대한 불신이나 냉소주의, 혐오감을 ㉤ 일으킬 수 있으며, 선거 과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 줄 수 있다. 부정식 보도에 이러한 부정적인 기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정식 보도가 계속 생산되는 이유는 시청률과 그에 따른 이익을 중시하는 방송사의 입장 때문이다.

방송사의 이익을 위한 보도로 경마식 보도도 있다. 경마식 보도란 정치적 쟁점이나 후보자의 자질·능력·도덕성 등 선거에서 중요한 본질적 내용보다는 득표율 예측, 후보들의 지지율 변화, 선거 운동 전략, 선거 운동에서 유권자들의 반응, 후보자 간의 연대·통합·갈등 등 흥미적 요소를 집중 보도하는 방식이다. 경마식 보도는 부정식 보도와 마찬가지로 해석적 저널리즘과 결합한 형태로 잘 나타난다. 가령 후보들의 지지율 변화, 후보자 간의 토론에 대한 경마식 보도 안에 이 보도 주제에 대한 언론인 또는 뉴스 패널들의 해석이 담긴다. 경마식 보도가 많이 나타나는 것은 선거 운동의 기간과 방송사의 이윤 추구하고 관련이 있다. 선거 운동 기간이 길어질수록 새롭고 신선한 선거 뉴스 기사에

대한 압박이 증가하며, 후보자 간의 정책 분석은 진부하고 지루하게 느껴진다. 실제로 경마식 보도 뉴스는 뉴스를 소비하는 유권자들에게 관심을 받으며, 방송사에서는 매일 새로운 뉴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선거 운동 초기에는 후보자에 대한 개인화 보도, 후보자의 정책 보도 등이 나타나지만 선거 운동이 진행되면서 이러한 보도는 줄어들고 경마식 보도의 양이 증가하는 것이다.

경마식 보도에는 선거 과정에서 부정적인 기능과 긍정적인 기능이 존재한다. 부정적인 기능은 공공 정책의 중요한 쟁점에 대해 후보자가 어떠한 입장에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게 되면서 중요하지 않은 이슈들이 오히려 유권자의 관심을 받게 될 수 있는 것이다. 반면에 긍정적 기능은 선거에 무관심한 유권자나 후보자와 접촉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대다수의 유권자가 선거에 관심을 갖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 정치적 무관심은 선거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경마식 보도는 해석적 저널리즘과 결합하여 유권자에게 사건을 보도하고 해석해 줌으로써 호기심을 자극하고 선거에의 참여, 나아가서는 정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다.

경마식 보도의 이와 같은 특징들 때문에 유권자는 경마식 보도를 접할 때 두 가지를 주의해야 한다. 하나는 보도를 흥미 있게 만들기 위해서 제시한 여론 조사가 대표성이 떨어진다는지, 여론 조사나 선거와 관련된 것들의 확대 분석, 해석 오류 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보도 내용이 궁극적으로 당선인이 갖추어야 할 능력과는 무관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마치 경마에 돈을 거는 사람이 특정 말의 당일 경기력과는 관련 없는 정보나 그 말의 외양에만 현혹되어 오판할 수 있듯이 유권자들이 선거 운동의 사소한 것에 현혹될 수도 있는 것이다.

27.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개인화 보도는 정치인이 속한 정당보다는 정치인 개인에 초점을 두는 보도이다.
- ② 경마식 보도는 선거 운동의 기간이 짧을수록 많이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는 보도이다.
- ③ 선거 방송 보도는 정치의식의 수준이 높은 사람들에게는 영향력을 가지지 못하는 보도이다.
- ④ 해석적 저널리즘과 결합한 부정식 보도는 정치의 부정적인 면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보도이다.
- ⑤ 경마식 보도는 선거의 중요 쟁점들에 대해 다양한 논쟁의 계기를 마련하는 긍정적 기능의 보도이다.

28.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방송 보도가 선거에서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경마식 보도나 부정식 보도의 보도 주제는 ㉠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 ② 지역 국회 의원 선거나 지방 자치 단체장 선거에서 후보자 소속 정당 지도자의 선거 관련 행보에 대한 보도는 ㉡의 경우로 볼 수 있다.
- ③ ㉢은 부정식 뉴스 보도가 시청률을 높임으로써 방송사의 이익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 ④ ㉣은 선거 운동이 진행되면서 개인화 보도, 후보자 간의 비방 등과 같은 보도 내용이 반복되기 때문에 발생한다.
- ⑤ ㉣은 선거 운동 기간에서 선거 운동 전략, 선거 운동에서 유권자들의 반응과 같은 내용의 보도로 나타난다.

29. 윗글을 읽은 학생이 선거 방송 보도에 대해 보일 수 있는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보도 내용들 중에서 선거에 중요한 정보와 그렇지 않은 정보를 분별할 수 있어야겠군.
- ② 보도 내용들 중에서 단순히 유권자의 관심을 끌기 위한 내용이 있을 수 있음을 알아야겠군.
- ③ 보도 내용들 중에서 시청률이 높은 보도 내용들은 사실적인 정보를 내포하고 있다고 봐야겠군.
- ④ 보도에서 접하는 여론 조사 내용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론 조사 보도 내용의 신뢰성을 의심하는 태도를 가져야겠군.
- ⑤ 특정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내용의 보도가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정치에 대한 불신을 줄 수 있음을 인식해야겠군.

30. <보기>는 가상의 뉴스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뉴스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아나운서: ▲▲주(州) 뉴스의 두 번째 내용은 ▲▲주(州) 국회 의원 후보의 지지율입니다. 선거 운동이 후반기에 이른 지금, 설문 결과 각 후보들의 지지율은 A 후보가 57%, B 후보가 43%를 보이고 있습니다. 3일 전에 보도한 지지율과 비교하면 B 후보의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5% 상승했습니다.

기자 1: 네, 그렇습니다. A 후보의 지지율 하락과 B 후보의 지지율 상승은 지난주에 저희 뉴스에서 단독 보도한 A 후보의 과거 폭행 사건 의혹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 후보 간 토론에서 B 후보가 집요하게 이 사건을 공격했습니다. 폭행 사건 의혹과 토론에서 B 후보의 공격이 두 후보의 지지율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나운서: 그럼 A 후보의 폭행 사건 의혹에 대한 내용으로 이어 가겠습니다. 지난주 저희 뉴스의 단독 보도 이후 B 후보에 대한 부정적 내용의 보도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B 후보의 당 대변인이 기자 회견을 열고 A 후보의 폭행 사건 의혹 관련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관련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B 후보의 당 대변인이 사진을 보이면서 A 후보의 폭행 사건 무마를 주장하는 짧은 영상), 당 대변인의 기자 회견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자 1: 네, 지난주에 A 후보가 과거 ○○부 장관 재임 시절에 폭행을 저지르고 이를 무마시켰다는 보도가 나갔는데요. 영상에서 당 대변인은 폭행 장면이 담긴 사진을 제시하면서, A 후보가 폭행을 하고 이 폭행에 대한 수사를 무마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B 후보 측은 이 의혹을 A 후보의 도덕성과 관련지어 적극적인 공세를 펼치려 하는 것 같습니다.

- ① 아나운서가 두 국회 의원 후보의 지지율 변화를 언급한 것은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경마식 보도로 볼 수 있겠군.
- ② 기자 1이 A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진 원인을 폭행 사건과 B 후보가 토론에서 이 폭행 사건에 대해 공격한 것에 있다고 분석한 것은 해석적 저널리즘의 보도로 볼 수 있겠군.
- ③ 아나운서와 기자 1이 A 후보의 폭행 사건을 보도하는 것은 시청자들에게 A 후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생기게 하는 부정식 보도로 볼 수 있겠군.
- ④ B 후보 당 대변인의 기자 회견 영상을 짧게 제시한 것은 폭행 사건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B 후보보다 당 대변인에게 초점을 가게 하려는 의도이겠군.
- ⑤ 기자 1이 B 후보 당 대변인의 기자 회견과 이것에 담긴 B 후보의 선거 전략을 언급한 것은 시청자의 관심을 끌기 위한 것이겠군.

31. 문맥상 ㉠과 바꿔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유래(由來)할
- ② 조성(造成)할
- ③ 획책(劃策)할
- ④ 유지(維持)시킬
- ⑤ 확장(擴張)시킬

[32~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산업 구조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비용 절감을 위한 기업 경영 방식이 확산되면서 기존의 전형적인 노무 제공 형태와는 다른 비전형적인 노무 제공 형태가 늘어나고 있다. 노무란 육체 또는 두뇌를 사용하여 일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생산직, 사무직의 경우는 전형적인 노무 제공 형태에 해당하며, 최근 늘어나고 있는 무급 인턴, 자원봉사, 플랫폼을 통한 노무 제공 등은 비전형적인 노무 제공 형태에 해당한다. 노무 제공 형태가 다양화됨에 따라 우리 사회에서는 비전형적인 노무 제공자의 법적 지위에 대한 문제가 대두하고 있다. 비전형적인 노무를 제공한 당사자는 스스로를 근로자라고 주장하고 ㉠ 노무를 제공받은 사용자는 해당 노무 제공자가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여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렇다면 노무 제공자가 근로자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판단하는 것일까?

우리나라의 근로 기준법에서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 제공의 대가로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하는데,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금품 지급의 의무가 있는 근로와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해 제공되는 금품은 임금이 해당하지 않으며, 근로자가 특수한 근무 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한 실비, 사용자가 의례적·호의적으로 지급하거나 복리 후생 차원에서 지급하는 급여도 임금이 해당하지 않는다. 임금과 유사한 말로 보수는 말이 있는데, 보수는 총급여액과 같은 개념으로 성과급, 복리 후생비 등이 포함되어 임금보다 광의의 개념을 가진다.

근로 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라는 말은 노무 제공에 대한 계약이 고용 계약인지, 도급 계약인지, 위임 계약인지를 따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고용 계약은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이다. 도급 계약은 당사자가 어떠한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이다. 위임 계약은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으로 보수가 지급될 수 있다.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라는 말은 노무 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를 판단한다는 것이다. 노무 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여러 기준을 통해 판단할 수 있다.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노무 제공자가 복무 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고,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여 노무 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다면, 이 노무 제공자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본다. 이 밖에도 노무 제공 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지, 노무 제공자가 사용자에게 전속되어 있는지

등도 주요한 판단 기준이다. 그렇다면 무급 인턴, 자원봉사, 플랫폼을 통한 노무 제공 등의 비전형적인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들은 근로자로서 인정받을 수 있을까?

무급 인턴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에게 대해 종속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무 제공에 대한 어떠한 보수도 지급받지 않는 노무 제공자이다. 이들은 임금을 대가로 하지 않지만 교육 훈련, 경험, 추후 고용 가능성 혹은 고용 기회 등을 대가로 얻는다. 자원봉사를 하는 노무자는 무급 인턴과 마찬가지로 임금을 지급받지 않는다. 자원봉사 활동 기본법에서는 자원봉사를 사회 문제 예방이나 해결을 위해 활동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거나 국가의 공익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각종 공사(公私) 조직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자원봉사의 특성으로 자발성, 무보수성, 공익성, 비영리성 등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자원봉사의 형식을 취했지만 해당 노무에 대한 실비를 지급받으면서 비교적 지속적으로 일정 기간 이상 노무 제공을 한 사람이 자신은 실제로 근로자였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금품의 제공이 노무 제공과 대가 관계에 있는지 여부는 전적으로 노무 제공 의사가 무엇이었는지에 의해 판단된다. 노무 제공자가 계약 당시 아무런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원봉사 관계를 목적으로 하였던 것이라면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없다. 플랫폼을 통한 노무 제공이란 온라인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노무라는 의미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는 운송업체의 운전기사, 배달 대행업체의 배달 종사자 등은 플랫폼을 통한 노무 제공자에 해당한다. 플랫폼을 통한 노무 제공자는 무급 인턴이나 자원봉사 형식의 노무 제공자와 달리, 임금을 지급받는다. 그러나 이 경우는 사용자의 직접적인 지휘나 감독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과 계약 관계의 지속성, 사용자에게 전속성 등의 측면에서 볼 때 근로자가 아니라 자영업자의 지위에 더 가깝다는 견해가 있다.

근로 기준법에 근거한 이러한 판단에 대해, 노무 제공자를 사회적 약자로 규정하고 사회적 약자의 이익 보호를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노동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저 임금법, 고용 보험법 등 노동 관계법의 보호를 받지만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 관계법의 보호에서 배제된다.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퇴직금과 사회 보험료에서 사용자 부담분을 납입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법적, 경제적 부담을 져야 하기 때문에 노무 제공자를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에 대해 최상위 법인 헌법의 제32조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모든 노무 제공자는 헌법적 관점에서는 모두 근로자라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규범적 측면에서 노무 제공자가 근로자인지 아닌지에 대한 법적 기준을 확고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다양한 노무 제공 형태를 두루 검토하여 정당한 노동 체계를 ㉡ 마련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32. 밑글의 ‘근로 기준법’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직업의 종류는 근로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되지 않는다.
- ② 교육 훈련이나 경험, 고용 기회 등은 노무 제공에 대한 임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③ 사업장에서 개별 직원에게 지급하는 일회적 성격의 상여금은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④ 근로자는 사용자가 지정한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에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⑤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노무 제공자가 자신이 제공한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33. ㉠의 이유를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노무 제공자가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사용자가 노무 제공자와 종속적 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 ② 노무 제공자가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사용자가 노무 제공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 부담과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되기 때문이다.
- ③ 노무 제공자가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사용자가 노무 제공자에게 임금의 하위 항목으로 복리 후생비를 추가로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 ④ 노무 제공자가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사용자가 노무 제공자와 맺은 위임 계약을 도급 계약으로 전환해야 하는 의무가 생겨나기 때문이다.
- ⑤ 노무 제공자가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사용자가 노무 제공자의 업무 처리 성과에 비례하는 보수를 필수적으로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34. 밑글을 참고하여 <보기>의 ㉠에 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우리나라의 노동조합법에서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이 때문에, ㉠ 근로 기준법에 의거하면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노무 제공자들이 노동조합법에 의거하여 근로자로 인정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

- ① 사용자에게 대해 종속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한 무급 인턴은 ㉠에 포함된다.
- ② 생산직이나 사무직에 종사하며 월급을 받는 노무 제공자들이 ㉠에 해당한다.
- ③ 근로의 의무를 명시한 헌법 조항은 ㉠와 같이 인정받고자 하는 주장을 반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 ④ 사용자로부터 임금이 아닌 보수를 지속적으로 지급받아 생활한 것이 ㉠와 같이 인정받고자 하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다.
- ⑤ 사용자와 고용 계약을 맺었으나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사람들은 ㉠를 근거로 내세워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에 대한 지급 요구를 할 수 있다.

35. 밑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가) 우리나라의 한 초등학교에서 자원봉사자로 위촉되어 1일 3만 원의 활동비를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4년간 근무한 노무 제공자들이, 자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교육감을 상대로 실지급액과 최저 임금과의 차액, 연차 유급 휴가 수당, 휴일 근무 수당, 퇴직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들의 청구에 대해 법원은 1일 3만 원의 활동비는 실비에 해당하고 당사자들의 노무 제공 의사에 따라 이 노무는 자원봉사에, 노무 제공자들은 자원봉사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며 청구를 기각하였다.

(나) 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음식을 배달하고 해당 노무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았던 노무 제공자들은 자신들이 온라인 플랫폼과 근로 계약 관계에 있는 근로자임을 인정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법원은 해당 온라인 플랫폼이 배달 종사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그 이동 거리를 합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했고 이에 기초하여 배달 종사자들의 접속을 제한하였음을 근거로 해당 온라인 플랫폼과 배달 종사자 간에 근로 계약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 ① (가): 노무 제공자들은 근로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받아 노동 관계법에서 보장하는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한 것이겠군.
- ② (가): 법원은 노무 제공자들이 해당 노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받기는 하였지만 애초의 계약 목적이 보수를 지급받는 것에 있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겠군.
- ③ (가): 법원은 노무 제공자들이 근로가 아닌 노무를 제공한 것이며 지급받은 활동비가 노무 제공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그 이외의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고 본 것이겠군.
- ④ (나): 노무 제공자들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거래하고 해당 노무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았으므로 자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자라고 주장하는 것이겠군.
- ⑤ (나): 법원은 해당 온라인 플랫폼이 배달 종사자를 직접 감독하였다는 점을 들어 배달 종사자가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었으므로 실질에 따라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본 것이겠군.

36.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교정(敎正)해야 ② 구축(構築)해야 ③ 규합(糾合)해야
- ④ 달성(達成)해야 ⑤ 조장(助長)해야

[37~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채권은 정부, 지방 자치 단체, 특수 법인 또는 주식회사와 같은 발행자가 투자자를 대상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미래에 일정한 이자와 원금의 지급을 약속하고 발행하는 채무 증서를 말하고, 채권 시장은 이러한 채권이 거래되는 시장을 의미한다. 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적인 상품들은 하나의 상품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가격과 거래량이 결정되는 데 반해, 투자 자산을 거래하는 채권 시장은 신규로 발행된 채권이 최초로 거래되는 발행 시장과 이미 발행된 채권을 대상으로 투자자들 간 매매가 이루어지는 유통 시장으로 구분된다. 채권이 최초로 발행되어 투자자에게 판매되는 발행 시장에서의 채권 물량과 가격이 결정되는 방식은 유통 시장에서의 그것과는 상이하게 이루어진다. 채권의 발행 시장과 유통 시장은 가끔 도매 시장과 소매 시장에 빗대어 설명되기도 한다. 이처럼 채권 시장을 발행 시장과 유통 시장으로 구분하는 것은 소수의 대형 투자자들이 발행 시장에 참가하여 물량을 확보한 뒤 이를 유통 시장에서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경험에 따른 것이다.

채권 발행 시장에서의 거래 방식은 매수인의 특성 및 자금의 규모에 따라 사모 발행과 공모 발행으로 구분된다. 사모 발행은 발행자가 특정 투자자와의 사적인 교섭을 통해 채권을 매각하는 것으로, 주로 소규모의 단기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에 활용된다. 반면 공모 발행은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거액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채권을 발행하는 것으로, 발행자가 당초 의도한 발행 규모에 비해 시장에서 소화되어 매출되는 규모가 적어 자금 조달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위험이 잠재하므로 사모 발행에 비해서는 보다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요구된다.

한편 공모 발행은 발행 위험의 귀속 여부에 따라 직접 발행과 간접 발행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직접 발행은 채권 공모와 관련한 발행 위험을 발행자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방식이고, 간접 발행은 중개 회사가 채권을 인수함으로써 발행 위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는 방식이다. 간접 발행은 중개 회사가 발행 위험을 부담하는 정도에 따라 총액 인수와 잔액 인수 방식으로 다시 구분된다. 총액 인수는 중개 회사가 발행자와 약정한 가액으로 채권 발행 총액을 인수한 후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이를 판매하는 것으로, 중개 회사의 인수 가격과 일반 투자자의 판매 가격 간의 차이는 중개 회사가 전액 부담하는 방식이다. 이에 비해 잔액 인수는 발행자와 약정한 가액으로 일차적으로 발행자의 명의로 일반 투자자에게 판매한 다음 판매되지 못한 잔여분에 한해 중개 회사가 인수하여 처리하는 방식이다. 총액 인수의 경우 중개 회사는 채권 발행 전액을 자기 명의로 구입해야 하므로 많은 자금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에게 판매하기까지 채권을 보유하여야 하므로 상대적으로 높은 시장 위험을 부담하는 대신 발행자로부터 잔액 인수의 경우에 비해 높은 수수료를 받는다. 간접 발행의 경우 중개 회사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채권 발행자가 직접 발행보다는 간접 발행을 더 선호하는데 이는 발행 위험을 분담하는 것과 더불어 중개 회사가 가지고 있는 조직적인 판매망과 전문적인 지식을 통해 채권 판매를 촉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민간이 발행하는 채권에는

채무 불이행과 같은 신용 위험이 존재한다. 따라서 채권 발행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에는 투자자는 발행자보다는 신용 있는 중개 회사를 신뢰하고 투자를 결정하기 때문에 채권 발행자는 비록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더라도 간접 발행을 선택하게 된다.

한편 채권 유통 시장은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에 따라 장내 시장과 장외 시장으로 구분된다. 장내 시장은 거래소 내에서 다수의 투자자가 매매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체결되는 반면 장외 시장에서는 거래소 밖에서 인터넷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가격 탐색 후 증권 회사의 중개를 통한 양자 간 매매가 체결되는 방식으로 거래가 형성된다. 채권은 주식과 달리 만기가 있는 금융 상품으로, 비록 발행자가 동일하더라도 표면 금리나 만기 상환일, 이자 지급 방식 등에 따라 종목이 다양하므로 표준화가 어려워 장내보다는 주로 장외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채권 가격이 결정되는 방식 역시 발행 시장과 유통 시장은 상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시장 수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유통 시장과는 달리 발행 시장에서의 채권 가격은 경매 방식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채권 경매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은 되도록 낮은 가격에 채권을 매입하여 자신의 수익을 극대화하고자 한다. 경매에 참여하는 것을 응찰 또는 입찰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 입찰 조건으로는 입찰 금리와 입찰 금액을 제시하게 된다. 입찰 금리를 투자자가 자의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금리 호가 단위에 따라 제시하여야 한다. 입찰 결과 채권을 배정받는 경우를 낙찰되었다고 하고 이 경우 입찰 금리와 입찰 금액은 낙찰 금리 및 낙찰 금액이 된다. 금리와 채권 가격은 역의 관계를 가지므로, 채권 발행자는 되도록 낮은 금리를 제시한 투자자에게 채권 물량을 우선적으로 배정하면서 발행 물량을 소화해 나간다. 입찰에서의 경쟁이 높아질수록 입찰 금리는 낮아지게 된다. 발행된 채권 물량은 입찰 금리가 낮은 순서부터 높은 순서로 올라가면서 입찰에 참여한 투자자에게 단계적으로 배정된다. 채권 발행액이 모두 소화되는 경우는 그 수준에서의 입찰 금리를, 모두 소화되지 않을 경우 입찰 금리 중에서 가장 높은 금리를 최고 낙찰 금리라고 부른다.

발행 시장에서의 채권 가격이 효율적으로 형성되고 경매 수입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응찰률을 충분히 높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 경매 방식에는 단일 가격, 복수 가격 및 차등 가격 낙찰 방식이 존재한다. 단일 가격 낙찰 방식에서는 최고 낙찰 금리를 경매 청산 금리로 정하여 낙찰된 모든 물량에 이 금리를 적용하는 반면, 복수 가격 낙찰 방식의 경우는 개별 투자자가 제시한 금리에 인수 금액을 적용해 나가면서 순차적으로 채권 물량을 소화해 나간다. 한편 차등 가격 낙찰 방식은 단일 가격과 복수 가격 낙찰 방식을 혼합한 것이다. 여기서는 먼저 단일 가격 낙찰의 방식대로 최고 낙찰 금리를 결정한 후 그 이하의 응찰 금리를 일정한 간격으로 그룹화하고 각 그룹 내에서의 최고 금리를 그룹 내의 모든 인수 금액에 동일하게 적용하되 그룹별로는 상이한 금리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입찰 시에 금리를 제시하는 단위, 즉 금리 호가 단위가 0.05% 포인트이고 최고 낙찰 금리가 5.00%이며 그룹 내 금리 간격이 0.1%포인트라고 하면 차등 금리 구간은 [5.00%~4.90%], [4.85%~4.75%], [4.70%~4.60%] 등과 같이 그룹화되고, 그룹별로 적용되는 낙찰 금리는 각 그룹의 최고 금리인 5.00%, 4.85%, 4.70% 등이 된다.

37. 밑줄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채권 발행 시장은 투자자 특성 및 자금 규모에 따라 사모 발행과 공모 발행으로 구분된다.
- ② 채권 발행 시 과소 판매에 대한 발행 위험은 공모 발행보다는 사모 발행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
- ③ 채권 발행에서 잔액 인수의 경우에는 총액 인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험이 낮아 수수료도 적다.
- ④ 채권은 발행자가 같더라도 상품 특성상 표준화가 어려우므로 장내보다는 장외 시장에서의 거래가 보편화되어 있다.
- ⑤ 경매를 통해 채권의 발행 가격이 결정될 때 채권 투자자의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경매 방식은 단일 가격 낙찰 방식이다.

38. 밑줄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갑국 정부는 1,000억 원에 해당하는 국채를 발행하고자 한다. 국채 경매에는 A~F까지 6개의 금융 회사만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의 입찰 조건은 아래와 같다.

금융 회사	입찰 조건	
	입찰 금리(%)	입찰 금액(억 원)
A사	5.05	200
B사	5.04	200
C사	5.03	100
D사	5.02	200
E사	5.00	200
F사	4.99	200

갑국 정부는 어떤 방식으로 국채 경매의 낙찰 방식을 채택할지 고민하고 있다. 만약 갑국 정부가 차등 가격 낙찰 방식을 국채 경매 방식으로 채택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룹 내 금리 간격을 0.02%포인트로 설정하기로 하였다.

- ① 단일 가격 낙찰 방식에서의 경매 청산 금리는 5.05%이다.
- ② 갑국의 국채 금리 호가 단위는 0.01%포인트 이하이다.
- ③ A사의 낙찰 금리는 경매 방식에 관계없이 5.05%이다.
- ④ 차등 가격 낙찰 방식을 적용할 경우 D사에게 적용되는 낙찰 금리는 5.02%이다.
- ⑤ F사가 최종적으로 배정받는 국채 금액은 100억 원이다.

39. 밑글을 읽고 추론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채권 종목의 표준화가 쉬워질수록 장내 시장에서의 거래는 더 활성화될 것이다.
- ② 차등 가격 낙찰 방식에서 그룹 내 금리 간격이 커질수록 채권 발행자의 수익은 높아질 것이다.
- ③ 채권 발행자에 대한 정보가 더 많이 공개될수록 공모 발행에서 직접 발행의 비중은 증가할 것이다.

- ④ 중개 회사의 선정 시 잔액 인수에 비해 총액 인수의 경우 중개 회사의 자금력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 ⑤ 차등 가격 낙찰 방식은 낮은 가격으로 채권을 인수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의 요구와 높은 가격으로 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발행자의 요구를 결합한 시도라고 이해할 수 있다.

40. 밑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채권 경매에서 응찰률은 발행 예정 물량 대비 응찰 물량을 의미한다. 발행 예정 물량이 모두 낙찰되기 위해서는 응찰률이 100% 이상 되어야 하며, 채권 발행자에게 유리한 낙찰 가격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응찰률이 높아야 한다. 발행자에게 있어서 낮은 응찰률은 당초 예상한 정도의 자금이 조달되지 못하는 과소 판매와 더불어 불리한 입찰 조건으로 채권을 발행해야 하는 문제를 야기한다. 일반적으로 저조한 응찰률은 발행 시장에서의 경쟁이 (㉠)된 상태인 것을 의미하므로 낙찰 금리를 (㉡) 시켜 채권 투자자들에게는 투자 수익률을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에 따라 채권 투자자들에게는 담합 등의 전략적 행동을 통해 응찰 물량을 조절하고자 하는 유인이 발생하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채권 발행자는 자체적으로 내정 수익률을 정한 뒤 이보다 (㉣) 입찰 금리를 제시한 금액부터 순차적으로 낙찰되도록 하는 방식을 이용하기도 한다.

- | | | | | |
|------|----|----|----|---|
| | ㉠ | ㉡ | ㉢ | ㉣ |
| ① 심화 | 상승 | 하락 | 높은 | |
| ② 심화 | 하락 | 상승 | 낮은 | |
| ③ 심화 | 하락 | 상승 | 높은 | |
| ④ 약화 | 상승 | 상승 | 낮은 | |
| ⑤ 약화 | 하락 | 상승 | 높은 | |

41. 밑글을 통해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은?

- ① 채권의 발행 시장에서 입찰 금리와 이에 따른 채권 가격 간의 관계는 무엇인가?
- ② 채권의 발행 시장과 유통 시장에서의 가격 결정 방식이 상이한 이유는 무엇인가?
- ③ 채권의 유통 시장에서 장외 거래가 장내 거래보다 더 일반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 ④ 채권의 발행 시장에서 채권 가격 결정 시 상이한 낙찰 방식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⑤ 채권의 공모 발행에서 중개 회사를 통한 간접 발행이 직접 발행보다 선호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42~4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현행 민사 소송법에는 소송 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재판이 공정해야 함은 말할 것도 없지만, 공정함만 추구하다 보면 재판의 진행이 더디게 되어 재판을 통해 달성하고자 한 소송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재판이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진행되는 것도 중요하다. 소송 당사자 중 한쪽이 출석하지 않았을 때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그 사람이 제출한 소장, 답변서, 준비 서면 등을 진술 내용으로 갈음한다. 소송 당사자가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진술을 대체할 서류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변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을 진행한다. 그리고 시효라는 제도를 두어서 소송 사건에 대해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제소 기간을 정해 두고 있다. 시효는 일정한 사실 상태가 오래 계속된 경우에 그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와 합치하느냐 여부를 묻지 않고 사실 상태를 그대로 존중하여 그 권리관계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사건 발생 이후 해당 제소 기간이 지나면 옳고 그름을 불문하고 누구도 해당 사건에 대해 더 이상 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이는 분쟁이 발생한 이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을 경우 소송 진행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소송 당사자들의 권리관계가 장기간 불안정해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이들 규정은 소송 실무상 진행의 속도와 권리 안정 문제를 실제적 진실보다 더 중요시한 조치이다.

조선 시대에도 이와 유사한 제도로 취송 기한, 정소 기한 등이 있었다. '취송 기한(就訟期限)'은 소를 제기한 후 소송의 당사자가 불출석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출석하지 않는 당사자는 패소시키고, 성실히 출석해 대기한 당사자에게 사리의 옳고 그름을 더 이상 따지지 않고 승소하게 해주는 제도이며, '친착 결절법(親着決折法)'이라고도 불렸다. 이는 소송 진행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소송을 지연시키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장치로, 조선의 건국 초기에는 송정*으로부터 소송 당사자의 거주지까지 거리에 따라 취송 기한을 정했고 이후 소송 당사자가 송정에 출석해 서명하는 것까지 규정하게 되었다. 소송의 양 당사자 중 누구라도 출석하였을 때는 자기 성명을 직접 쓰도록 했는데 이를 '친착(親着)'이라고 불렀고, 판결하는 것을 '결절(決折)'이라고 했다. 친착 결절법은 여러 차례의 변화를 거쳐 1746년에 편찬된 『속대전(續大典)』 「형전(刑典)」 청리조(聽理條)에 따르면, ㉠ 소송이 개시되어 50일이 되도록 이유 없이만 30일이 넘게 불출석하면 송정에 나와 서명한 자에게 승소 판결을 내리도록 했다. 이 50일의 기간은 관청이 개정할 날만 해야 했다. 이때 계속 출석한 자의 출석 일수는 고려하지 않는다.

「정소 기한(呈訴期限)」에서 '정소'란 소를 제기하기 위한 문서인 소장(訴狀)을 관청에 낸다는 의미로, 정소 기한은 사적인 권리를 침해당하였을 때 소장을 제출할 수 있는 법정 기한을 말한다. 『경국대전(經國大典)』 「호전(戶典)」 전택조(田宅條)에서 이 규정을 확인할 수 있다. 소송 대상 중 가장 분쟁이 빈번했던 재산인 토지, 주택, 노비 등에 관한 소송은 분쟁 발생 시기부터 5년 내에 소를 제기해야만 하며 5년을 넘길 시에는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 관계 등을 심사하는 사건 심리는 물론 소장 접수조차 불가능했다. 또한 소장을 제출, 접수했다더라도 그로부터 5년 동안 소송에 임하지 않을 때에도 심리하지 않고 기각했다. 여기에 예외는 있었다. 토지나 주택을 도매*당한 경우, 토지나 주택 관련 소송에서 확정 판결이 나지 않은 경우, 상속 재산을 자식들이 나눠 가져야 하는데 나누지 않고 자식 중 누군가가 홀로 독식한 경우, 조각인이 지주에게 토지를 돌려주지 않고 점유하는 경우, 셋집에 세 들어 사는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집을 비워 주지 않고 자기 것으로 삼은 경우 등에는 5년의 정소 기한에 구속되지 않고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즉 소송 당사자들 사이의 권리관계가 표면적으로 불안정해 보이더라도 실제적 진실을 따지는 것을 속도와 효율보다 더 중시한 단서 조항인 것이다. 그러나 정소 기한을 둘러싸고 계속 문제가 발생했는데, 특히 무한정 정소 기한을 인정하는 전택조의 예외 규정에 대해 자손 대의 잦은 분쟁 발생 등 소송 지체로 인한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에 1518년 11월 중종은 도매, 상속 재산의 침해 등을 제외한 사안 중 30년 기한이 넘은 옛일에 대해서는 심리하지 않도록 하였다.

소송 과정의 신속성과 효율성이 중요하긴 했지만 소송이 정지되는 경우도 있었다. 소송의 정지를 정송(停訟)이라고 불렀는데, 조선은 건국 초부터 농번기에는 농사를 짓는 백성이 소송에 ㉡ 매달리느라 농사를 소홀히 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소를 금지했다. 만일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일시적으로 이를 정지하도록 했다. 춘분부터 추분 사이의 농번기에 소송 업무를 중단하도록 한 것을 무정(務停)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다시 추분부터 춘분까지의 농한기에는 제소를 받거나 소송 업무를 속개시켰는데, 이를 무개(務開)라고 했다. 정송은 농업을 중시하는 당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것인데 이를 악용한 소송의 지체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조선 시대에도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공정성과 더불어 민사 소송의 기본 이념인 신속성과 경제성이라는 이상을 실현하고자 했다. 하지만 소송에서 속도와 효율 문제가 무엇보다 중시되면 실제로는 정당하지만, 제때 규정을 따르지 못한 권리자에게는 가혹한 것이 되기도 한다. 이로 인해 조선 시대 소송 절차에서 신속성, 효율성은 실제적 진실을 따지는 문제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었다. 오늘날에도 이와 마찬가지로 소송에서 어떤 가치를 우선시할 것인가는 앞으로도 계속 논쟁거리가 될 것이다.

*권리관계: 권리와 의무 사이의 법률관계.

*송정: 예전에, 송사(訟事)를 처리하던 곳.

*도매: 훔친 물건을 팔. 여기서는 소유자 몰래 다른 사람이 사고파는 범죄.

42. 밑글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이 아닌 것은?

- ① 현행 민사 소송에 시효 제도를 둔 이유는 무엇인가?
- ② 조선 시대에 소송을 정지하는 기간을 둔 이유는 무엇인가?
- ③ 조선 시대 소송에서 소를 접수하는 기한에 제한이 없는 경우는 어떤 것인가?
- ④ 조선 시대 소송에서 재판에 승복하지 않았을 때는 어떤 절차를 따라 항소했는가?
- ⑤ 소송을 제기한 후 소송의 당사자 중 한쪽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판결이 이루어졌나?

43. ㉠을 사례와 관련지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소송이 개시된 후 관청이 개정하지 않은 날을 포함해 50일 동안 갑이 불출석한 일수가 만 30일이 넘는 경우 을의 출석 일수와 상관없이 을이 승소한다.
- ② 소송이 개시된 후 관청이 개정하지 않은 날을 뺀 50일 동안 을이 출석해 서명한 일수가 만 30일이 되고, 갑이 불출석한 일수가 30일을 넘어야 을이 승소한다.
- ③ 소송이 개시된 후 관청이 개정하지 않은 날을 뺀 50일 동안 을이 출석해 서명한 일수가 21일이 되고 이유 없이 갑이 불출석한 일수가 만 30일이 넘는 경우에는 을이 승소한다.
- ④ 소송이 개시된 후 관청이 개정하지 않은 날을 뺀 50일 동안 이유 없이 갑이 불출석한 일수가 만 30일이 넘는 경우 갑의 불출석 일수에서 을의 불출석 일수를 뺀 일수로 을의 승소 여부를 판단한다.
- ⑤ 소송이 개시된 후 관청이 개정하지 않은 날을 포함해 50일 동안 갑이 불출석한 일수가 만 30일이면 갑이 불출석한 합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을이 불출석한 일수가 만 30일이 되지 않으면 을이 승소한다.

44. 『경국대전』 「호전」 전택조의 정소 기함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소송의 속도와 효율성을 중시한 규정이다.
- ② 규정을 둘러싼 문제로 이후 일부 내용이 바뀌었다.
- ③ 예외 규정으로 인해 소송 지체가 발생하기도 했다.
- ④ 사적인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소장을 제출할 수 있는 법정 기한이다.
- ⑤ 정소 기한의 적용을 받아 소장을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을 넘기더라도 사건 심리는 받았다.

45. <보기>는 조선 시대 소송을 신문 기사로 재구성한 학습 활동의 일부이다. 재판관의 판단을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판결 뉴스> 1529년 12월 7일

**A 씨 조부의 땅을 몰래 판 B 씨에 대한
재판관의 판단은?**

지난해 원고 A 씨는 A 씨의 사촌인 피고 B 씨가 A 씨 조부의 소유였던 논 전부를 매매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A 씨의 조부는 생시에 소유 논 일부를 매매할 권한을 B 씨에게 주었는데 B 씨는 무단으로 논 전부를 매매하여 그 대금 전부를 취하였던 것이다. A 씨는 자신의 부친 소유로 알고 있었던 논을 B 씨가 매매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30년이 지난 뒤에 B 씨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 B 씨는 정소 기한이 지났다고 주장하며, A 씨가 해당 논 근처에 살면서 30년 동안 추심*하지 않은 물건을 A 씨 부친의 상속분이라고 칭하며 반환 청구를 한 것은 부당하다고 억울함을 호소하였다.

*추심: 찾아내어 가지거나 받아 냄.

- ① 전택조의 예외 규정에 속하더라도 30년이 넘었기에 원칙적으로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보았을 것이다.
- ② 토지에 대한 소송은 해당 사건이 발생한 시기부터 5년 내에 제기해야 하므로 정소 기한이 지났다고 보았을 것이다.
- ③ 상속받아야 할 조상의 토지를 도매 당한 경우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한에 제한이 없다고 보고 소장을 접수 받았을 것이다.
- ④ 토지가 도매 당했더라도 원고의 조부가 사망했기 때문에 권리관계가 불안정하다고 보고 실체적 진실을 따지지 않았을 것이다.
- ⑤ 원고가 30년이 지나는 동안 조상의 토지에 대해 반환 청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토지를 매매한 상태를 인정하였을 것이다.

46.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농사철이 되어 소송을 정지한 후에 원고와 피고 중에 바른 판결을 얻고자 하는 자가 송정에 오랫동안 기다려도 판결이 나지 않아 3~4년 동안 재판이 지체되기도 한다. 재판관이 송정에 나온 사람에게 판결을 내리고자 하여도 원고와 피고가 함께 봉한 소송 문서를 열어 볼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송사를 끝낼 기약도 없고 도리어 간사한 술책에 빠지게 된다. 지금 이후로는 소송을 정지한 사람들이 소송 업무가 개시된 이후에 재판정에 불출석하면 업무 개시일부터 사는 곳의 거리를 따져 그 날짜를 제외하고, 송정에 나오지 않은 예에 따라서 원고나 피고 중에 송정에 나온 사람에게 판결을 한다.”

- 1553년의 수교(受教)*

*수교: 조선 시대에, 임금이 내리던 교명(敎命)

- ① 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농번기가 되면 중지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구나.
- ② 소송이 정지되는 규정으로 인해 재판이 지체되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었구나.
- ③ 정지된 소송을 다시 시작할 때 친착 결절법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구나.
- ④ 무정 기간에 정지되었던 소송의 문서를 다시 열어 보려면 원고와 피고가 함께 출석해야 했구나.
- ⑤ 지체된 소송 내용과 비슷한 사건의 판례에 따라 판결하여 재판의 공정성을 제고하도록 하였구나.

47. ㉠와 문맥상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아이들이 철봉에 매달려 논다.
- ② 김 교수는 밤낮 연구에만 매달려 있다.
- ③ 처마 끝에 매달린 등불이 바람에 흔들린다.
- ④ 버는 사람은 큰형 하나인데 입은 일곱이나 매달려 있다.
- ⑤ 책을 읽을 때는 걸으로 드러난 단어의 뜻에만 매달리지 말아야 한다.

가독성을 위해 여백으로 남겨두었다.

[48~5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헌법은 국가의 조직과 구성 및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을 위한 최고의 규범 체계이자 권리 장전으로, 정치와 사회 질서의 지침을 제공한다. 국가의 법질서는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에 의하여 지배되기 때문에 법률, 명령, 규칙 등 헌법의 모든 하위법은 헌법에 위반되어서는 안 되며, 모든 국가 기관은 공권력을 행사할 때 헌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런데 헌법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법률의 적용 과정에서 해당 법률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거나 공권력의 작용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 일반 법원이 아닌 헌법 재판소에서 헌법 재판을 통해 해당 분쟁을 해결하게 된다.

헌법 재판은 헌법의 최고 규범성과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헌법 재판의 본질적 성격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론이 제시된다. 먼저 ㉠ 사법 작용설은 헌법 재판을 사법 기관의 가장 일반적인 기능인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과정이라고 본다. 헌법 재판은 헌법 분쟁에 대하여 헌법 규범에 대한 해석을 그 본질로 하므로, 사법 작용설에서는 헌법 재판을 일반 법률의 해석과 같은 범주에 있다고 보는 것이다. 헌법 재판의 담당 기관이 재판소로 명명되어 있고 담당 기관이 입법권 및 행정권과 구별된 독립 기관이라는 점, 사건에 대한 최종적인 유권적 판단 작용을 한다는 점이 사법 작용설의 근거로 제시된다. 하지만 사법 작용설은 헌법과 법률의 규범 구조적 차이를 무시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일반 법률의 해석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법률의 의미 내용을 인식하고 여기에 구체적 사실 관계를 포섭함으로써 결론의 도출에 이르는 방법이 주가 되는 데 비해, 헌법은 추상성과 개방성을 특질로 하여 그 의미 내용이 완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법률의 해석 방법에 따라 법조문의 의미 내용을 사후적으로 인식하는 과정을 통해서 해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 입법 작용설은 헌법 재판의 본질을 입법 작용으로 이해한다. 이 이론은 법률의 효력을 객관적으로 상실시키는 헌법 재판소의 권한에 비중을 두고 헌법 재판의 본질을 이해하려고 한다. 위헌 법률 심판이나 헌법 소원 등의 헌법 재판에서 헌법 재판소의 결정은 법률의 폐지, 개정, 입법을 강제하는 등의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헌법 재판은 의회의 입법 작용과 유사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입법 작용설에 따르면 의회의 입법 작용을 적극적 입법 작용으로, 헌법 재판소의 법률 통제는 소극적 입법 작용으로 본다. 하지만 입법 작용설은 헌법 재판의 본질을 법률 통제만으로 여긴다는 문제가 있다. 오늘날의 헌법 재판은 법률 통제에만 그치지 않는다. 특히 헌법 소원 제도는 본질적으로 사법 기관의 통제를 목적으로 한다. 그 밖에 정당 해산 심판이나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고위 공직자에 대한 탄핵 심판, 권한쟁의 심판 등 국가 권력 전반에 대한 통제 권한이 헌법 재판소에 부여되고 있으므로 헌법 재판의 본질을 입법 작용으로만 이해하는 입장은 헌법 재판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파악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또한 헌법 재판소는 의회에 의해 제정된 법률 중 위헌적인 부분만을 판단할 뿐, 새로운 법률을 만드는 권한이 없으므로 헌법 재판을 입법 작용으로 단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정치 작용설은 헌법 재판을 정치 작용으로 보는 견해로, 칼 슈미트가 주장한 이론이다. 슈미트는 정치적 속성을 지니는 문제들은 소송을 통해 결정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어떤 규범이 존재하고 그 규범의 구성 요건에서 구체적 사안이 포섭될 수 있는 경우에만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이 된다고 할 수 있는데, 헌법은 헌법 제정권자의 정치적 결단의 산물이므로 정치적 법인 헌법을 둘러싼 분쟁은 결코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헌법의 내용과 관련한 문제점이나 의견들은 전형적인 법적 분쟁의 해결 방법으로는 결정될 수 없고, 헌법 재판이란 정치적 성격을 특성으로 가지는 헌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과정이므로 실질적으로 정치적 성격을 가진다고 보았다. 하지만 정치 작용설은 헌법의 정치적 결단으로서의 성격만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헌법의 규범으로서의 성격을 무시한다는 문제가 있다. 헌법은 여러 정치 세력 간의 공존을 위한 정치적 투쟁과 타협의 산물이므로 다른 규범보다 정치적 성격이 짙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헌법은 국민에 의해서 제정되고 개정되는 국가의 최고 규범이므로 법적 규범으로서의 성격은 명확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헌법 재판은 개방적이고 추상적인 헌법 규범의 의미를 구체화하는 작업으로 이 과정에서 헌법 재판관에 의해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반영될 가능성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헌법 재판관의 헌법 해석은 어디까지나 '법적 논리에 의해 뒷받침되는 법적 논증'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정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재판은 독립성이 보장된 국가 기관에 의하여 사법적 절차를 통해 최종적 판단을 내리는 국가 작용이라고 볼 때, 헌법 재판도 그 본질이 재판이므로 외형적 특성으로 볼 때 넓은 의미에선 사법 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헌법 재판은 헌법적인 쟁점을 해결하기 위한 재판이라는 점에서 구체적 사건의 분쟁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사법 작용과는 구별된다. 헌법 재판은 헌법을 기준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권력에 대한 통제 과정이고 이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국가 체제의 유지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그 본질을 찾을 수 있다.

48. 위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헌법 재판의 종류가 무엇인지 소개하면서 각각에 대해 구체적 사례를 바탕으로 설명하고 있다.
- ② 헌법 재판의 절차적 과정을 제시하면서 각 과정의 특징을 다른 재판과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다.
- ③ 헌법 재판의 본질적 성격에 대한 이론들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서 각 이론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
- ④ 헌법 재판을 통한 권력 및 규범 통제의 정당성에 대해 논증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 ⑤ 헌법 재판의 이론적 특징을 설명하면서 헌법 재판을 통해 국가 체계의 권력을 강화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49. ‘헌법 재판’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 ① 헌법 재판소가 제정한 규범에 따라 법률이 올바르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판단한다.
- ② 다른 법 규범과 비교했을 때 헌법이 상위에 있다는 것과 헌법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제도이다.
- ③ 국가 기관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본권 침해를 바로잡기 위해 헌법의 수정 여부를 판단한다.
- ④ 법률의 헌법 위배 여부를 두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일반 법원이나 헌법 재판을 통해 해당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이다.
- ⑤ 독립성이 보장된 국가 기관에 의한 사법적 절차를 통해 헌법을 비롯하여 법률, 명령, 규칙 등 각종 법규를 제정하는 역할을 한다.

50. ㉠,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헌법 재판이 일반 법률의 해석과 같은 범주 내에 있다고 판단한다.
- ② ㉡은 헌법 재판의 결과가 법률에 미치는 영향을 바탕으로 헌법 재판의 본질을 이해한다.
- ③ ㉠과 ㉡은 모두 헌법 재판을 통해 법률을 통제할 수 있다고 본다.
- ④ ㉠은 ㉡과 달리 헌법 재판소에 부여된 다른 권한들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 ⑤ ㉡은 ㉠과 달리 헌법 재판이 입법부의 권한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본다.

51. 위글을 참고할 때, 헌법에 대한 ‘칼 슈미트’의 견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헌법은 규범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정치적 행위의 결과물이다.
- ② 헌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헌법 제정권자의 정치적 결단이 영향을 미치게 된다.
- ③ 헌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과정은 실질적으로 정치적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다.
- ④ 헌법에 대한 분쟁은 전형적인 사법 기관의 해결 방법으로는 해소될 수 없다.
- ⑤ 헌법은 정치적 속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이 포섭될 수 없어 헌법 재판은 성립할 수 없다.

52. 위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헌법 재판 중 하나인 위헌 법률 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합치하는지를 판단하는 제도로, 민사 소송이나 형사 소송의 재판 과정에서 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위헌의 소지가 있을 경우 법원의 직권이나 소송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법원이 제청하여 진행된다. 헌법 재판소가 위헌을 선고하면 해당 법률은 결정이 이루어진 날부터 즉시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다음은 위헌 법률 심판의 사례이다.

○○○ 씨는 타인을 모욕하는 표현을 하였다는 혐의를 받아 □□ 법원에서 형사 재판을 받게 되었다. 원고 측인 검사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형법 제311조를 적용하여 ○○○ 씨를 처벌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하였고, ○○○ 씨는 해당 법률이 모욕의 범위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설정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위헌 법률 심판을 신청하였다. 헌법 재판소는 형법 제311조는 위헌이 아니라고 판결하였다.

- ① 헌법 재판소는 새로운 법률을 창설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형법 제311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결정을 하였군.
- ② 헌법 재판소는 형법 제311조의 내용이 완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구체적으로 해석해주는 역할을 하였군.
- ③ 헌법 재판소는 □□ 법원의 사건에 대해 최종적인 유권적 판단 작용을 하여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를 모욕하지 않았다는 결정을 하였군.
- ④ <보기>의 위헌 법률 심판이 열리게 된 계기는 □□ 법원에서 진행 중인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자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겠군.
- ⑤ 헌법 재판소의 결정 이후 재개된 □□ 법원의 재판에서 피고인 ○○○ 씨는 현재 상태의 형법 제311조에 따라 유죄 여부를 판단 받게 되겠군.

[53~5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19세기 말에는 공공 기관에서의 의사 결정을 분석하기 위해 조직을 하나의 유기체로 보는 기능주의 이론이 주로 활용되었다. 하지만 기능주의로는 공공 기관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는 비판이 대두되면서 공공 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원인 관료의 행동 동기를 분석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베버는 관료가 주어진 정치적 목표를 최대한 달성하고자 하며, 사익이 아닌 공익을 ㉠ 추구한다고 가정하였다. 또한 관료는 정책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완전히 배제되고, 오직 정치인이나 상급 관료의 결정을 충실히 집행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그는 관료 개인의 특성은 정책의 실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여기고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하지만 관료의 특성에 따라 정책의 실현 여부가 달라지기도 하고,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무조건 복종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그의 이론은 비판을 받았다.

이러한 비판 속에 공공 부문에서의 의사 결정을 분석하기 위해 경제학적 방법을 적용한 공공 선택론이 대두하기 시작했다. 공공 선택론은 관료를 공공재와 행정 서비스를 능동적으로 공급하는 존재이자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고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려는 존재로 ㉡ 간주한다. 그리고 의사 결정의 주체는 집단이 아니라 개인이라고 여긴다. 공공 선택론은 관료와 정치인 사이에는 일종의 교환 관계가 형성되고 교환의 매개체는 예산이라고 가정하였다. 관료는 공공재와 행정 서비스를 공급하는 공급자이고, 국민을 대표하는 정치인은 이에 대한 수요자라고 볼 수 있는데, 공공 선택론자들은 관료가 일련의 활동과 예상 결과를 정치인에게 공급하고, 정치인은 서비스 공급의 대가로 예산을 지급하는 시장이 형성된다고 보았다. 공공 선택론을 바탕으로 관료의 행동 동기를 분석한 대표적인 학자로 니스카넨과 던리비가 있다.

㉢ 니스카넨은 시장에서의 협상에서 관료가 유리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보았다. 그는 마치 독점 기업처럼 관료가 공공재와 행정 서비스의 가격과 수량을 모두 결정할 수 있다고 보았는데, 이 원인을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찾았다. 관료는 경험을 바탕으로 정치인들이 서비스 공급의 대가로 어느 정도까지 예산을 지급할 용의가 있는지 알고 있지만, 선거로 인해 자주 교체되는 정치인들은 공공재나 행정 서비스 생산의 최소 비용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렵다. 따라서 정치인은 이러한 정보를 관료에게 의존하게 된다. 니스카넨은 관료가 이러한 지위를 이용하여 ㉣ 자신의 부서 예산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보았다. 그는 관료가 예산을 극대화하려는 동기를 합리성과 생존이라는 측면에서 설명하였다. 관료 역시 사익을 추구하는 인간이므로 효용을 최대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효용의 결정 요인은 소득이라는 금전적 요소와 명성, 부서 관리의 용이성 등 비금전적 요소를 합친 것인데, 일반적으로 예산 규모가 커질수록 두 요소는 모두 커진다. 따라서 관료의 입장에서 예산을 극대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관료는 직원 충원, 복지 등을 원하는 조직원으로부터 예산 획득에 대한 압박을 받는데 이에 부응하지 못하는 관료는 조직에서 ㉤ 도태하게 된다. 니스카넨은 이러한 이유로 관료가 소속 부서의 예산을 극대화하고자

노력하는데, 이로 인해 공공재가 과잉 생산되어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이 나타난다고 보았다.

㉥ 던리비는 니스카넨이 관료나 기관을 지나치게 일반화하고, 관료 행동의 동기를 예산에서만 찾았다고 비판하며 예산 극대화와 관련된 여러 요소 간의 상관관계를 설명하였다. 그는 기관의 유형에 따라 관료의 예산 극대화 추구 정도가 달라진다고 보았는데, 예를 들어 영리 활동을 하는 거래 기관의 관료는 예산 확보의 동기가 강하지만, 하위 조직의 자금 사용 및 집행 방식을 감독하는 통제 기관의 관료는 하위 조직의 성과에 따른 책임을 지므로 예산 확보의 동기가 약하다고 보았다. 또한 그는 관료의 지위에 따라 예산 극대화의 동기는 물론이고, 극대화하기를 원하는 예산의 유형도 다르다고 보았다. 일반적으로 예산이 늘면 직업 안정성이 ㉦ 증대되어 비상근직 등을 포함한 하위 관료의 효용이 커지지만, 고위 관료는 회의 참석, 예산 증가를 위한 증거 제시 등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얻는 효용이 작다. 따라서 고위 관료들은 하위 관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예산 극대화에 소극적이라고 보았다. 한편 예산에는 기관 자체의 운영비로서 관료의 수급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핵심 예산, 해당 기관이 민간 부문에 쓰는 지출액과 핵심 예산을 합친 관청 예산 등이 있다. 던리비는 하위 관료의 효용은 직위의 수, 직업의 안정성과 관련이 깊고, 고위 관료의 효용은 부서의 위신, 민간의 고객과의 관계 형성 등과 관련이 깊기 때문에 하위 관료는 핵심 예산을, 고위 관료는 관청 예산을 극대화하려 한다고 보았다.

던리비는 고위 관료가 예산 극대화의 동기를 갖는 것은 맞지만, 고위 관료의 효용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소속 부처의 최적화라고 보았다. 부처의 최적화는 부처의 크기, 직무 관련 권한 등과 관련이 있다. 그는 고위 관료가 관리 회피 성향을 갖고 있어 많은 부하 직원을 ㉧ 통솔하기보다 소수의 유능한 직원들과 근무하기를 원하고, 자신의 재량으로 정책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내부 구조를 개편하려 한다고 보았다.

실제로 관료들이 선택을 내리는 과정에는 많은 요소가 작용하기 때문에 선택을 일반화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 동기를 추적하려는 노력을 통해 관료들이 조직의 하위 구성 요소로서 기능한다고 본 기능주의 이론에서는 설명할 수 없었던 많은 부분을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53.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관료제의 한계점을 제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 ② 관료의 유형을 분류하는 이론의 변모 양상을 통시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 ③ 관료에 대한 정의가 통시적으로 어떻게 변해 왔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④ 관료의 행위를 상반되게 분석한 두 이론과 이를 절충한 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 ⑤ 관료의 행동 동기 분석을 통해 공공 기관의 의사 결정을 분석한 이론들을 소개하고 있다.

54.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베버는 관료 개인의 특성은 정책의 실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여겼다.
- ② 기능주의 이론은 관료를 조직이라는 하나의 유기체에 속한 하위 구성 요소로 보았다.
- ③ 베버는 관료를 정치인이나 상관의 결정을 충실히 집행하고자 노력하는 존재로 보았다.
- ④ 니스카넨은 독점 기업처럼 정치인이 행정 서비스의 가격과 수량을 모두 결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 ⑤ 던리비는 부처의 최적화가 예산의 극대화보다 고위 관료의 효용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55. ㉠, ㉡의 공통적인 생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공공 기관과 관련한 의사 결정의 주체는 개인이 아닌 집단이다.
- ② 모든 공공 기관의 관료가 예산 극대화를 추구하는 정도는 동일하다.
- ③ 공공 기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료 개인보다 제도의 분석이 필요하다.
- ④ 관료 조직은 상급자의 명령에 하급자가 무조건 복종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 ⑤ 관료는 능동적으로 서비스를 공급하는 존재로서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고자 한다.

56. ㉢의 이유를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주어진 정치적 목표를 최대한 달성하기 위해서
- ② 적절한 양의 공공재를 생산하여 적재적소에 활용하기 위해서
- ③ 직원 충원을 부정적으로 여기는 조직원들을 설득할 수 있으므로
- ④ 효용과 관련된 금전적 요소와 비금전적 요소를 모두 높일 수 있으므로
- ⑤ 관료는 정치인에 비해 공공재 생산 비용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려우므로

57. ‘던리비’의 견해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고위 관료 A와 하위 관료 B는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기관에 근무하고 있다. A와 같은 직급의 관료 C는 하부 조직들의 자금 사용을 감독하는 기관에 발령을 받아서 근무하고 있다. A와 C는 자신의 기대와 기관의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하여 조직의 구조 및 직무를 개편하려 한다.

- ① 기관의 성격을 고려할 때, A는 C에 비해 예산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동기가 더 크겠군.
- ②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 대비 얻는 효용의 크기는 A보다 B가 더 크겠군.
- ③ B의 효용은 A의 효용에 비해 직위의 수, 직업의 안정성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겠군.
- ④ B는 기관 자체의 운영비 편성보다 민간 부문에 지출하는 예산의 확보에 더 큰 노력을 기울이겠군.
- ⑤ A와 C는 모두 정책에 대한 자신의 통제권을 늘리는 방향으로 부처의 내부 구조를 변경하려 하겠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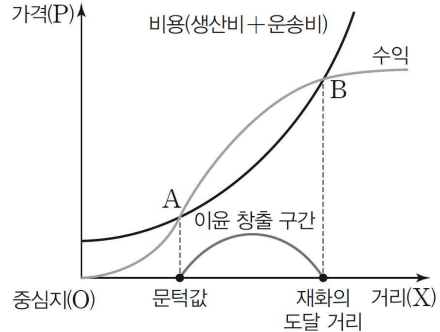
58.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좇는다
- ② ㉡: 여긴다
- ③ ㉢: 헤매게
- ④ ㉣: 커져
- ⑤ ㉤: 거느리기

[59~6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독일의 크리스탈러는 남독일의 도시 분포를 바탕으로 도시의 규모, 입지 등에 일정한 원리가 작용한다는 것을 분석해 취락이나 상업 입지의 분포가 규칙성을 지닌다는 중심지 이론을 ㉠ 도출하였다. 중심지란 배후지에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곳으로서, 재화의 도달 거리와 문턱값을 통해 이해될 수 있다. 점포를 예로 들면 재화의 도달 거리는 운송비 제약에도 판매가 실현되는 최대한의 거리이며, 문턱값이란 최소 요구치라고도 하는데, 판매 수익이 총비용을 ㉡ 상회하기 시작하는 거리이다. 재화의 도달 거리와 문턱값은 공급자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고, 수요자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다.

지대를 비용으로 고려하지 않을 경우, 공급자 입장에서 이윤 공식은 '이윤=수익-(생산비+운송비)'이다. 즉 지대를 제외할 때, 이윤은 수익에서 생산비와 가격(P)을 제외한 부분이다. 공간(거리)의 다른 변수를 고려하지 않고 운송비만 거리에 따라 점차 증가할 경우, 수익은 원점에서 발생하지 않고, 물품 판매 거리가 증가함에



<그림 1>

따라 수익이 증가한다면 <그림 1>과 같이 수익 비용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다. 다만 판매 거리가 증가하면 수익은 원점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지만, 비용도 0보다 큰 세로축 절편에서 시작하여 거리에 따라 증가한다. 그리하여 수익 곡선과 비용 곡선은 두 지점에서 만나게 된다. 이때 A점에 대응하는 거리가 문턱값, 즉 최소 요구치이고 B점에 대응하는 위치가 재화의 도달 거리로, 그래프를 통해 볼 때 이윤은 A와 B 사이에서 창출되며, 이때 중심지가 영향을 미치는 범위인 배후지는 중심지에서 B점에 이르는 거리만큼 원형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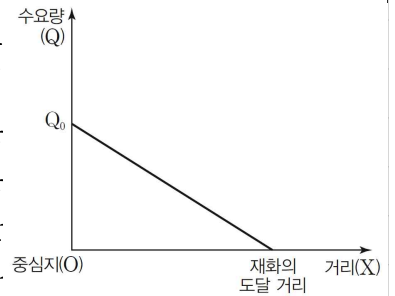
[A] 수요자가 직접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 이동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수요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문턱값과 재화의 도달 거리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수요자 입장을 고려해 문턱값과 재화의 도달 거리를 ㉢ 산출하려면 공간 수요 그래프를 활용할 수 있다. 공간 수요 그래프란 거리에 따른 수요량 감소 관계를 함수의 형태로 나타낸 것이다. 수요는 상품 구매 가격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므로 수요량(Q)은 가격(P)과 반비례 관계에 있는데, 이를 수요 함수로 나타내면 'Q=Q₀-aP'로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Q₀는 공짜 수요량으로서, 가격이 0인 제품이 팔릴 수 있는 최대 수요량을, a는 가격 증가에 따라 수요가 감소하는 비율인 '수요 감소율'을 의미한다. 이때 공짜 수요량은 실제 수요량과는 다르며, 점포의 위치, 유동 인구 수 등 다양한 변수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 그런데 수요자는 점포까지 일정한 거리를 이동해 상품을 구매한다. 이러한 구매 ㉣ 통행을 고려하면 실제 수요자의 상품 구매 가격은 주어진 시장 가격인 P₀에 교통비를 더한 값이 된다. 이때 b를 거리에 따라 수요자의 상품 구매 가격을 증가시키는

'단위 거리당 교통비', X를 '거리'라 할 때 상품 구매 가격 P는 'P₀+bX'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수요 함수에 상품 구매 가격 함수를 대입하면 다음과 같은 공간 수요 함수를 도출할 수 있다.

$$Q=Q_0-a(P_0+bX)=Q_0-aP_0-abX$$

이때 앞 항인 'Q₀-aP₀'은 구매 통행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의 수요량인 시장 가격 수요량이다. 그리고 ab는 거리의 증가에 따른 수요 감소율이라 할 수 있다. 이를 공간 수요 그래프로 표현하면



<그림 2>

<그림 2>와 같은데, 그래프의 기울기는 거리의 증가에 따른 수요 감소율을 나타내는 'ab'이다. 이때 재화의 도달 거리는 공간 수요 그래프가

거리 축과 만나는 지점이다.

점포의 수익은 수요량과 판매 거리가 증가할수록 늘어난다. 하지만 수요자 입장에서는 점포로부터의 거리가 증가할수록 상품 구매 가격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수요량은 줄어들기 때문에 거리가 일정 수준 이상 증가하면 이윤 증가율은 감소하고 재화의 도달 거리에서 이윤의 누적값인 총이윤이 최댓값을 이루며 재화의 도달 거리를 지나면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윤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 이때 거리만 고려한다면 점포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요 수준인 '문턱값', 즉 '최소 요구치'의 범위와 재화의 도달 범위는 점포를 중심으로 원형으로 나타난다. 만일 최소 요구치의 범위 이상의 거리에서 판매가 이루어진다면 해당 점포는 총비용보다 수익이 많아져 이윤을 획득하는데, 점포가 유지되는 경우 재화의 도달 거리는 ㉤ 통상 최소 요구치보다 멀기 때문에 공간을 독점한 상황이라면 점포는 그만큼의 이윤을 획득한다. 재화의 도달 범위와 최소 요구치의 범위는 주어진 지역의 인구 밀도나 소비 성향, 그리고 단위 교통비 등의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소득이 증가하여 소비 성향이 좋아지면 최소 요구치의 범위는 줄어들고, ㉥ 교통비가 낮아지면 재화의 도달 범위는 확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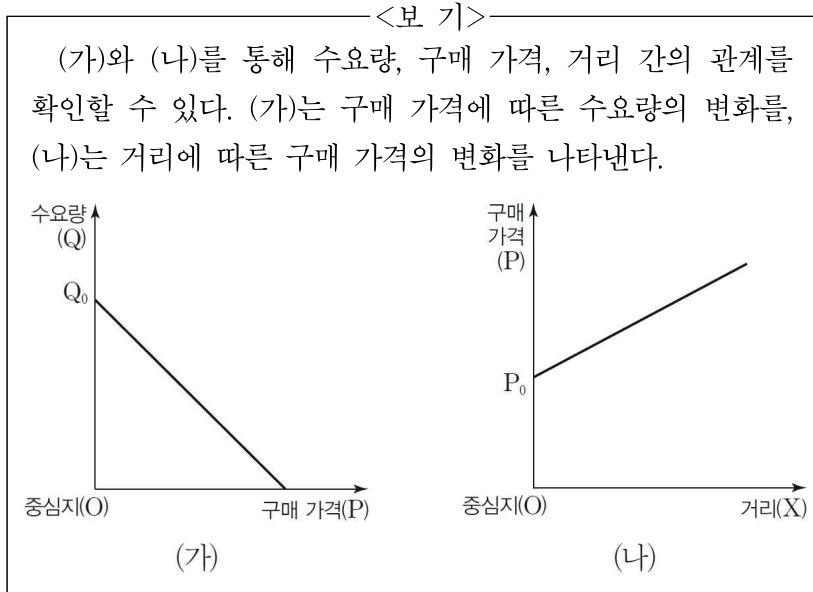
중심지 이론은 현실 세계에 대한 가정을 바탕으로 연역적인 탐구 과정을 통해 도출된 이론으로, 대상 지역을 등질적 평면으로 가정하는 등 현실적 적용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가장 널리 알려진 공간 구조 이론으로, 공간 경제론이나 지역 분석 분야에도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59. 윗글을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공급자 입장에서 수익이 증가하더라도 이윤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 ② 상품 가격이 일정할 경우 수요량은 구매자가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 이동해야 하는 거리에 반비례할 것이다.
- ③ 운송비와 교통비가 낮아지면 재화의 도달 거리가 확대되어 공급자 입장에서는 이윤이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
- ④ 공급자 입장에서 재화의 도달 거리 내에서는 판매 거리가 중심지와 가까워질수록 수익과 이윤이 증가할 것이다.

- ⑤ 수요자가 직접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 이동해야 할 경우, 실제 수요자의 상품 구매 가격은 시장 가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60. [A]를 바탕으로 <보기>를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에서 Q₀은 점포의 위치, 유동 인구수 등 다양한 변수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
- ② (가)에서 Q₀은 구매 가격이 0일 경우의 수요량이므로 실제 수요량과 다를 수 있다.
- ③ (나)에서 그래프의 기울기가 커질수록 거리에 따른 수요자의 상품 구매 가격 변화 폭이 증가할 것이다.
- ④ (가)에서 구매 가격에 따른 수요량 감소 폭이 작아지면 (나)를 고려할 때, 거리에 따른 구매 가격은 일정하게 유지될 것이다.
- ⑤ (나)에서 다른 변수는 동일하고 P₀이 증가하면 구매 가격이 상승하므로 (가)를 고려할 때, 수요량도 감소할 것이다.

61. 문턱값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수요량, 생산비, 운송비 중 어느 하나라도 변화하면 달라질 수 있다.
- ② 공급자 입장을 고려할 경우 점포의 수익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지점이다.
- ③ 수요자들의 소득이 증가함으로써 배후지의 수요량이 증가하면 변화할 수 있다.
- ④ 일반적으로 점포의 판매가 실현되는 최대한의 거리보다 점포에서 가까운 거리에 형성된다.
- ⑤ 공급자 입장에서는 판매 거리가 증가할 때 수익 곡선과 비용 곡선이 처음 만나는 지점이다.

62. 윗글을 참고하여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지대(地代)는 비용의 일종으로, 지대의 수준은 주로 위치에 의해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판매 점포가 입지하기 좋은 위치인 ‘목 좋은 곳’은 유동 인구가 많고 교통이 편리해 접근성이 좋아 기본적으로 수요량이 많은 곳으로, 대개 도시 중심부나 도로 교차점, 전철 환승역 같은 교통로의 결절인 경우가 많다. 접근성이 좋은 곳은 방문객이 많아 이윤을 획득하기 용이한 곳이다. 수요자가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 점포로 이동해야 할 경우, 일반적으로 점포의 이윤은 도심과 점포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높고 도심과 점포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낮아져 이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지점까지 점포가 입지할 수 있다. 따라서 토지 이용 계약이 갱신되는 시점에서는 ‘목 좋은 곳’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으로 지대가 상승하고, 결국 공급자의 수익 중 일부는 지대로 지출되고 해당 지주는 토지 소유의 대가로 지대를 통한 이윤을 축적한다.

- ① ‘도심과 점포의 거리’에 따라 실제 수요량이 달라져 공급자의 수익이 달라질 수 있겠군.
- ② 다른 곳보다 공짜 수요량이 많은 곳은 ‘목 좋은 곳’의 성격을 갖춘 곳이라 할 수 있겠군.
- ③ 점포에서 거리 증가에 따라 ‘이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지점’은 공급자 입장에서 최소 요구치라 할 수 있겠군.
- ④ ‘교통로의 결절’은 점포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준보다 판매가 많이 이루어질 확률이 높은 곳이라 할 수 있겠군.
- ⑤ 공급자 입장에서 지대를 비용으로 고려할 경우, 문턱값과 재화의 도달 거리 사이에서 창출되는 이윤은 ‘지대’에 의해 줄어들 수 있겠군.

63. ㉠의 이유로 적절한 것은?

- ① 거리에 따른 수요 감소율이 고정되고 거리당 교통비도 줄어들기 때문에
- ② 공급자의 상품 판매 거리가 증가하면 이윤과 비용이 모두 줄어들기 때문에
- ③ 소비자들의 실제 상품 구매 가격이 줄어들고 구매 통행 범위도 확대되기 때문에
- ④ 수요자들의 구매 통행이 줄어들고 상품 구매 가격 증가에 따라 수요 감소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 ⑤ 상품 판매량이 증가하면 점포로부터 이윤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지점까지의 거리가 줄어들기 때문에

64. ㉠~㉣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판단이나 결론 따위를 이끌어 냄.
- ② ㉡: 어떤 기준보다 웃둡.
- ③ ㉢: 물건을 생산하여 내거나 인물·사상 따위를 냄.
- ④ ㉣: 일정한 장소를 지나다.
- ⑤ ㉤: 일상적으로, 또는 일상적인 경우에는.

수능특강 & 수능완성 평가원화 자료가 받고 싶다면?
→ <https://orbi.kr/profile/790404> (오르비 섹시스타)



2024학년도 수능특강 독서 1부 교과서 개념학습
→ <https://orbi.kr/00063596848>



2024학년도 수능특강 독서 2부 인문·예술
→ <https://orbi.kr/00063614166>



2024학년도 수능완성 유형편 독서
→ <https://orbi.kr/00063585220>



2024학년도 수능완성 실전 모의고사
→ <https://orbi.kr/00063585115>



수능특강 독서 2부 사회·문화 정답					
위협 소구					
①	⑤	①	⑤		
거버넌스 이론					
①	③	④	④		
대공황의 원인과 경제 정책					
①	③	③	③		
데이터 소유권과 데이터 경제					
③	⑤	④	④	⑤	
박물관과 사회의 관계					
⑤	③	④	⑤		
국제 수지의 이해와 활용					
③	⑤	③	④	④	
선거 방송 보도의 종류와 특징					
①	④	③	④	②	
노무 제공자의 법적 지위와 보호					
⑤	②	④	③	②	
채권의 발행 및 가격 결정 방식					
②	⑤	②	④	②	
조선 시대 소송 제도					
④	③	⑤	③	⑤	②
헌법 재판					
③	②	④	⑤	⑤	
공공 선택론					
⑤	④	⑤	④	④	③
문턱값과 재화의 도달 거리					
④	④	②	③	③	③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